

2016년도

# 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 미래정치센터 연간활동실적

## 1. 일반현황

###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5층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 나. 인 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 고
박사급: 2 명	자체고용: 1 명	
석사급: 5 명		
기 타: 4 명	외부파견:	
합 계: 11 명	합 계: 1 명	

「주」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781,910,061	535,738	85,573,099	868,018,898	757,584,432	110,434,466	

「주」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2. 주요 활동 실적

### 가. 연구.개발실적(150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711~0823	정무위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자체	13P	
0824~0921	정무위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체	41P	
0922~1031	정무위	가계부채 대응방안	자체	53P	
0101~0107	안전행정위원회	공무원 성과평가제 확대의문제점 분석	자체	3P	
0104~0107	미래창조과학방 송통신위원회	미래부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개선방향 제안	자체	3P	
0210~0219	안전행정위원회	정부부처-민간기업 간 교류의 문제점 분석	자체	3P	
0216~0219	미래창조과학방 송통신위원회	R&D 실패 연구비 환수의 문제 와 개선방향 -실패의 수용과 자산화 관점-	자체	3P	
0201~0224	기획재정위원회	박근혜 정부 3년 평가보고서-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 우 리들의일그러진 자화상	자체	15P	
0213~0219	정무위원회	해외여론동향(2월 2-3주차)	자체	4P	
0213~0219	정무위원회	국내여론동향(2월 2-3주차)	자체	6P	
0301~0303	안전행정위원회	외교부 저성과자 해고의 문제점 분석	자체	3P	
0301~0303	정무위원회	해외 여론동향(3월 1-2주차)	자체	4P	
0301~0303	정무위원회	국내 여론동향(3월 1-2주차)	자체	7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301~0303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 ICT R&D투자로드맵 수립 에 대한 비판과 구조적 개선방향 제안	자체	2P	
0307~0308	안전행정위원회	균형·발전의 상생 지향 목적의 지 역발전특별회계 개선방향 제안	자체	3P	
0510~0519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갈등의 문 제점	자체	6P	
0510~0519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갈등의 해 결방향 제안 -공공성·민주성 제 고 방향	자체	4P	
0527~0602	안전행정위원회	민주화 이후의 지방자치 - 근 20년의 지속적 발전과 최근 3년 의 급격한 후퇴, 향후 발전의 길	자체	3P	
0701~0720	미래창조과학 위원회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의 국내 지역분원 운용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 분석	자체	6P	
0701~0720	미래창조과학 위원회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의 국내 지역분원 운용의 개선방향 제안 -지역의 산업·경제적 기여를 중 심으로	자체	4P	
0725~0802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노벨과학상 미배출 원인 분석	자체	3P	
0801~0810	법제사법위원회	법치의 개념 정립 -박근혜·노무 현 대통령 법치 인식 비교	자체	3P	
0901~0905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정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림 자 -전자결재로 국회 인사청문회 무시하는 대통령	자체	3P	
0921~0930	보건복지위원회	기본소득의 필요성	자체	14P	
1001~1005	보건복지 위원 회	기본소득의 이론적 배경	자체	8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006~1015	보건복지위원회	기본소득의 국내외 사례 분석	자체	19P	
1016~1031	보건복지위원회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응	자체	11P	
1101~1115	보건복지위원회	기본소득의 구상과 전략	자체	10P	
1101~1108	안전행정위원회	박-최 게이트와 거버넌스 붕괴, 거버넌스의 틀 및 대통령 하야 제안	자체	3P	
1101~1108	정무위원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분석 - 경제규모·국민피해액 분석	자체	12P	
1114~1123	정무위원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기업의 지하경제분석 -박-최와 대기업간 검은 거래와 국민손실액 추정	자체	3P	
1120~11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최 게이트로 인한 대중국 한류문화관광 측면 국민피해액 분석	자체	7P	
1210~1214	정무위원회	국정농단과 낮은 정부신뢰 속 정부의 책무성 회복의 길 -고약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 적절한 처벌	자체	3P	
1201~1216	안전행정위원회	자치법규과 신설의 문제점 분석	자체	2P	
1201~1216	안전행정위원회	자치법규과 신설 갈등의 해결방향 제안 - 지방자치 파괴하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 신설, 당장 중단해야!	자체	1P	
1219~12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근혜-최순실 문화농단: 근본·철학 없는 개입 -문화정책 4대 원칙 정립	자체	4P	
0102~0107	국토위	법정 기본형 건축비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자체	4P	
0506~0510	국토위	정부의 '맞춤형 주거방안 대책'의 문제점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자체	7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706~0719	국토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아파트 건축비 검증 분석	자체	12P	
1101~1208	기재위	정부 규제프리존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자체	87P	
0102~0107	여가위 등	한일 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의 해야...	자체	5P	
0101~0308	여가위 등	20대 총선공약	자체	41P	
0615~0622	정무위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방안 검토	자체	3P	
0622~0627	정무위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방안과 생리대 가격 안정화(안)	자체	6P	
0801~0810	법사위	스토킹 방지법안 검토	자체	7P	
0915~0926	여가위	가족돌봄휴직 확대 및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검토	자체	8P	
1101~1208	여가위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자체	P41	
0111~0115	환노위	정의당의 국토환경정책: 4대강 재자 연화,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	자체	17P	
0118~0122	농해수위	정의당의 동물복지정책: “동 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복지를 통한 생명존중 사회 실현	자체	11P	
0208~0226	산업위	정의당의 탈핵정책: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한국탈핵 비 전 2040	자체	32P	
0401~0429	산업위	정의당의 에너지정책: 제20대 총선공약과 정당별 비교와 평 가	자체	134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150407~160129	외교통일위원회	진보진영의 통일,외교,국방전략	외부	70P	
150604~160304	안전행정위원회	16년 총선승리를 위한 정의당 지지층 프로파일	외부	175P	
151027~160309	국회운영위원회	20대 총선 아젠다와 진보정치	외부	48P	
151228~160307	정무위원회	20대 국회가 추진해야할 경제민주화의 개념, 과제, 방안에 대하여	외부	84P	
151231~160222	국토교통위원회	1인가구 월세대책에 관한 연구	외부	38P	
160115~160324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의 실업부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외부	45P	
160627~16110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외부	127P	
0107~0109	국회운영위원회	1월 1-2주차 정세분석전망 : 선거구 미획정 장기화, 새누리 의회정치 파괴공작	자체	3P	
0107~0108	국회운영위원회	1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 : 여론동향	자체	10P	
0217~0219	국회운영위원회	2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새누리당의 기득권으로 만신창이가 된 선거구 획정	자체	3P	
0218~0219	국회운영위원회	2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여론동향	자체	8P	
0225~0303	국회운영위원회	3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 : 국민을 인질로 한 박근혜식 협박정치	자체	3P	
0302~0303	국회운영위원회	3월 1-2주차 정세분석전망 : 제2의 세월호-메르스 사태 다시 초래할 것인가	자체	4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302~0303	국회운영위원회	3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 : 여론동향	자체	9P	
0401~0412	안전행정위원회	총선 수도권 후보 출마자 지원 보고서	자체	10P	
0419~0422	국회운영위원회	정의당 개헌 대응 방향	자체	3P	
0419~0517	국회운영위원회	19대 총선 평가 보고서	자체	15P	
1004~1018	국회운영위원회	20대 대선 대응 관련	자체	5P	
1027~1102	국회운영위원회	박근혜 대통령 하야정국 대응방향과 과제	자체	5P	
1108~1111	국회운영위원회	탄핵소추, 하야 외국사례 보고서	자체	4P	
1115~1129	국회운영위원회	정의당 개헌 대응방향과 과제	자체	6P	
0623~0816	예결위원회	2015회계년도 결산안 분석	자체	25p	
0625~0715	운영위원회	국회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에 관한 연구	자체	10p	
0718~0918	산업통상 자원위원회	중소상공인 지원 제도 분석	자체	20p	
0726~0826	예결위원회	2016회계년도 1차 추경예산안 분석	자체	15p	
0820~1026	예결위원회	2017회계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자체	28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921~1201	예결위원회	국회 수정예산안을 통해 본 국회의 대표성 분석	자체	25p	
1003~1023	기획재정 위원회	2017년 국고보조사업 변동 추이 분석	자체	10p	
1003~1205	안전행정 위원회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체	20p	
0707~0714	교문위	학교 우레탄트랙 개선 검토	자체	5P	
0812~0825	교문위	학교 전기요금 체계 검토	자체	6P	
0901~0903	교문위	누리과정 해결방안 검토	자체	4P	
1027~1102	교문위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검토	자체	3P	
1110~1128	교문위	국정교과서 검토	자체	17P	
0425~0624	운영위원회	20대 국회 개원과 국회개혁 과제	자체	21P	
0425~0818	운영위원회	정의당의 개헌 대응 방향	자체	26P	
0502~0609	안전행정위원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문제점과 대응방안	자체	16P	
0615~0821	안전행정위원회	20대 국회 정치개혁 과제	자체	18P	
1007~1107	안전행정위원회	지방교부세 현황과 개혁방향	자체	15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012~1207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고용창출을 위한 법인세 개혁방안	자체	53p	
1017~1021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EU 법인세 개혁을 위한 지침 평가	자체	3p	
1017~10.31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노사협의회 활용 방안 검토	자체	7p	
1024~1104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법인세 과세 근거에 대한 논쟁 분석	자체	6p	
1031~1111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Stewardship Code의 도입배경과 개선방안	자체	3p	
1107~1121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검토	자체	12p	
1121~1125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토마 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와 법인세 개혁 방안 비교	자체	3p	
1128~1212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행위자 기반 모형의 정책 활용 가능성	자체	15p	
1212~1215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둘러싼 논쟁과 도입을 위한 과제	자체	10p	
1217~1218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초과이윤공유제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자체	4p	
1219~1221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실효세율 논란에 대한 검토	자체	3p	
1222~1224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자체	15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226~1228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AI와 자동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백악관 보고서 분석	자체	5p	
1227~1229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종업원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자체	3p	
0210~0211	교문위	누리과정 재정확보방안	자체	6P	
0301~0510	환노위 등	정의당 경제·민생정책 과제	자체	129P	
0415~0503	환노위 등	20대 국회 정책공약 비교검토	자체	18P	
0429~0601	기재위, 환노위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책	자체	23P	
0513~0516	환노위	전자산업 하청노동자 실명사건	자체	6P	
0602~0610	법사위, 환노위	정의로운 구조조정 입법과제	자체	8P	
0720~0722	기재위 등	정부 추경예산안 (구조조정) 검토	자체	3P	
0728~0729	기재위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 검토	자체	3P	
0728~0809	정무위	부정청탁금지법 검토	자체	7P	
0901~1210	기재위 등	소득불평등 해소방안	자체	123P	
0905~0910	환노위	체불임금 대책 검토	자체	12P	
1001~1021	기재위	정의당 세법 개정안	자체	31P	
1024~1026	기재위	법인세 인상 추가검토	자체	6P	
1218~1219	운영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자체	6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110~0223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정의로운 복지론 및 대표공약	자체	40p	
0110~0308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선진국형 혁신보육 공약	자체	20p	
0110~0310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보건의료대개혁 방안	자체	16p	
0110~0315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장애인 권리보장 5대 비전 및 20대 정책	자체	22p	
0110~0321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복지일반 공약	자체	18p	
0110~0329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노인 공약	자체	22p	
0110~0329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아동청소년 공약	자체	16p	
0310~0610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생애주기별·분야별 정책과제	자체	123P	
0901~1231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외부	52p	
0901~1231	보건복지위원회	미래 건강정책의 담론과 과제	외부	48p	
0901~1231	보건복지위원회	고령 친화 정책 개발	외부	68p	
0901~1231	운영위원회	최근 해외 진보정당의 정책 동향과 그 시사점	자체	68p	
0901~1231	운영위원회	좌파기득권 주장의 문제점과 사회연대적 해법 연구—이데올로기 비판, 사회연대적 해법	자체	66p	
0901~1231	정무위원회	중소상공인 20대 국회 입법과제 개발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외부	123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901~1231	기획재정위	고용창출을 위한 법인세 개혁방안	외부	71p	
0901~1231	운영위원회	청년 정책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 당 청년부문 조사연구	외부	77p	
0901~1231	안전행정위원회	지역 청년정책 개발 - 지자체 청년 조례 연구 및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외부	27p	
0901~1231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정책 개발 연구	외부	23p	
0901~1231	환경노동위원회	노동환경의 변화와 정책 대안	외부	57p	
1026~1029	운영위	기본소득제 관련 정책수요 조사	자체	5p	
1017	운영위	2016년 1~3사분기 정당지지율 변화추이분석	자체	4p	
1024	운영위	2016년 1~3사분기 대통령국정운영평가 변화추이 분석	자체	6p	
1031	운영위	2016년 10월 여론동향분석	자체	3p	
1107	운영위	2016년 11월1주 여론동향분석	자체	8p	
1114	운영위	2016년 11월2주 여론동향분석	자체	4p	
1116	운영위	촛불민심 대응방안	자체	5p	
1121	운영위	2016년 11월3주 여론동향분석	자체	3p	
1205	운영위	2016년 12월1주 여론동향분석	자체	6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212	운영위	2016년 12월2주 여론동향분석	자체	6p	
1219.	운영위	2016년 12월3주 여론동향분석	자체	6p	
1226	운영위	2016년 12월4주 여론동향분석	자체	5p	
1230	운영위	2016년 여론동향분석	자체	13p	

나. 토론회 등 개최(42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토론회	0122. 오후 3시	국회의원 회관 제7간담회 실	정부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파행과 그로인한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의당식의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	0128. 오후 4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 실	신년기획 토론회	한국의 정당정치 위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	0203.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 실	청년정책	논란의 청년정책, 첫 단추를 다시 꿰다 ; 정의당의 실업안전망 개혁 및 청년급여 신설에 대해 토론하고 효과적인 방안 에 대해 모색한다.	
토론회	0212. 오후 2시	국회 본청 216호	근로시간 단축	직장인의 시간은 불평등하게 흐른다 ; 점심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을 통한 <5시 퇴근법> 도입과 <유급휴가 확대>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으로 제안한다.	
간담회	0525. 오후 4시	중앙당 회의실	4.13 총선평가	총선 이후 정의당의 과제와 전망 ; 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한 해석	
간담회	0608. 오후 4시	중앙당 회의실	4.13 총선평가	총선 이후 정의당의 과제와 전망 ; 여론조사로 본 총선평가와 정의당의 과제	
간담회	0622. 오후 4시	국회의원 회관 제2간담회 실	청년의 병역의무	이공계 과학기술 청년인재들의 병역의 의무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나은 제도에 대해 모색한다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0623. 오후 4시	연구소 회의실	4.13 총선평가	총선 이후 정의당의 과제와 전망 ; 20대 총선평가와 정의당의 과제	
집담회	0705. 오후 5시	중앙당 회의실	브렉시트	지구화와 보호주의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발표회	0817. 오전 10시	중앙당 회의실	연구용역 중간발표회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0905. 오후 5시	중앙당 회의실	4차 산업혁명과 한국정치경제	신기술 혁명이 야기할 새로운 경제모델과 정치운동을 위한 상상과 전략들	
포럼	0921. 오후 5시	중앙당 회의실	기본 소득제	기본 소득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간담회	0926. 오후 7시	김대중 컨벤션센터	4.13 총선평가	총선에서 보여준 호남의 표심과 전망, 그리고 정의당의 과제	
토론회	0929.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9간담회실	연구용역 결과발표회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1118. 오후 5시	세종호텔	19대 대선	19대 대선, 정당의 국민소통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1227. 오전 10시	의원회관	촛불시민혁명	2016년 11월 촛불시민혁명! 탈 박근혜 체제와 새로운 민주공화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0224 오전 7시30분	국회본청	정의구현 정책단 경제 정책 토론	경제 정책 방향과 향후 정 의당 대안 모색	
포럼	0511 오전 7시 30분	국회본청	북한 당대회 이후 동북아 정세 논의	-북한 당대회 이후 동북아 정세 논의 정의구현정책단의 선거평가 및 20대 국회 제안 및 향후 운영방안 논의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포럼	0608 오전 7시30분	국회본청	정의당과 한국 탈핵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건설 중단으로 2040년 원전 ZERO 를 실현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을 선진국 수준으로의 확대 등 에 대한 검토	
포럼	0713 오전 7시30분	국회본청 223호	사드 사태와 동북아 위기 긴급 토론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여러 현안 의 안보학적 설명 -사드의 무기로서의 효용성 검증 -사드 배치 결정과 한국 경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 과 국회 동의 필요성	
포럼	0810 오전 7시30분	국회본청 223호	'브렉시트 세계는 어디로'	-브렉시트 및 세계화에 대한 분석과 진단 및 국제질서를 살펴보고 한국의 외교·안보·경제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련 전문가들의 진단 및 해법 모색	
포럼	0907 오전 7시30분	국회본청 223호	기본소득 가능성 검토	-현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경제적·재정적 가능성 외에도 정치적 가 능성의 수단 등에 대한 검토 -현 사회복지 제도와 충돌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에 대한 단계적 이면서도 제한적인 논의 방향을 잡고자 함.	
포럼	1012 오전 7시30분	국회본청 223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정의당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설 명 및 제안 및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방향 각 당 방안 비교 및 쟁점 검토	
포럼	1109 오전 7시30분	국회본청 223호	대통령 탄핵은 가능한가?	-대통령 탄핵의 절차와 실체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모색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연속세미나①	1114 오전 7시30분	국회본청 223호	트럼프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 연속세미나① 트럼프 당선과 한국경제	-트럼프의 승리 원인과 앞으로의 영향에 대한 분석	
연속세미나②	1116 오전 7시30분	국회본청 223호	연속세미나② 트럼프 당선과 한반도 안보	-트럼프 당선과 한반도 안보 전망에 대한 논의	
연속세미나③	1118 오전 7시30분	국회본청 223호	연속세미나③ 트럼프 현상의 의미와 한국사회	-"트럼프 정부의 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또 한국정치에 던져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포럼	1228 오전 10시	국회본청 223호	2017년 대선과 정의당	-시대 과제 등 대선 캐치프레이즈 및 대선 핵심의제나 공약 등 대표상품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	0523. 오전 10시	의원회관	20대 국회의 역할	재벌이 문제야, 20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	
토론회	0817. 오후 2시	의원회관	노동기본권	간접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과제' 토론회	
토론회	0906. 오전 10시	의원회관	조선하청노동	조선하청노동자 구조조정 실태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집담회	0112.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 의실	2016년 총선 대표공약을 위한 집담회	총선 공약 기초, 핵심 의제, 대표 공약 관련 제안 및 의견 자유토론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03.02 오전 8시	국회 본청 216호	국민월급 300만원과 복지임금 100만원, 어떻게 가능한가 간담회	국민월급 300만원과 복지임금 100만원 실현방안, 국민월급 300만원의 의미와 실현 경로	
세미나	04.26 오전 8시	국회 본청 219호	정의당 경제 현안 세미나	부실기업 실패와 구조조정 관련 정책 방향	
간담회	05.02 오전 8시	국회 본청 216호	테러방지법 간담회	테러방지법 대응 관련단체 간담회	
세미나	11.14 오전 8시	국회 본청 223호	트럼프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 연속세미나 ①	트럼프 당선과 한국경제	
세미나	11.16 오전 8시	국회 본청 223호	트럼프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 연속세미나 ②	트럼프 당선과 한반도 안보	
세미나	11.18 오전 8시	국회 본청 223호	트럼프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 연속세미나 ③	트럼프 현상의 의미와 한국사회	
간담회	08.10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	여성농민-정 의당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성농어업인육성 법 개정(안) - GMO 실험 및 재배, 상용화 금지 법안의 신설 - 농민의 가공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간담회	0822 오후 2시	국회본청 223호	부정청탁금지 법(김영란법) 시행과 농축산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의당-농축 산단체 대표자 간담회	한우, 과일, 인삼, 굴비, 전복 등 부 정청탁금지법 시 행에 따른 피해 우려에 대한 의견 및 대책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공청회	0921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강당	농축산물 소 비축진 특별 조치법 재정 안 공청회	부정 청 탁 금 지 법 시행에 따른 농축 수산 피해 생산자 를 지원하는 특별 법 마련	

다. 교육·연수활동(13건)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연구소 집합교육	0609	북한산 청운산장	-상반기 사업평가 토론 -4.13 총선평가 및 정의당의 전망 -하반기 사업기획 토론 -친목도모	
지방당직자 교육	0823~0824	창원축구센터	-지역정책 및 사업기획 및 토론 등	
연구소 집합교육	1028	인천 소래포구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중장기 전략의제 선정 -3기 지도부 친목도모	
연구소 집합교육	1103~1104	양양 썬비치로조트	-정당 및 정책연구소 중앙선관위 워크숍	
연구소 집합교육	1108~1109	대천 한화리조트	-당원의 3대 역량과 해외사례 -민주주의 정당 정치론 -단합대회 -부서별 간담회 -현안토론 및 간담회	
연구소 집합교육	1227	중앙당 회의실	-성평등 및 장애평등 교육 및 토론	
정예당원교육	0921	중앙당 회의실	중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	
현지교육	0930	대전시당 사무실	예산의 정치학	

「주」 연구소 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 합니다.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현재교육	1007	대전시당 사무실	정보공개 방법	
현지교육	1014	대전시당 사무실	대규모 투자사업 분석 방법	
현지교육	1028	대전시당 사무실	예산모니터링 방법론	
현지교육	1124	대전시당 사무실	대전시의 예산 톺아보기	
현지교육	1222	대전시당 사무실	분야별 예산 모니터링 방법	

라. 정책홍보(78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108	정책논평 /브리핑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대부업법 일몰 공백사태, 민생외면한 정부여당 책임크다.	
0401	좌담회	좌담회	경제전문가좌담회 "총선 경제이슈 진단"	
0827	정책논평 /브리핑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가격 상승만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0927	정책논평 /브리핑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의 9.26 채무조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1215	정책논평 /브리핑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한국은행의 금리동결(12.15)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12.14)에 대하여	
0119	정책브리핑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관련 정책브리핑	
0128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땅값거품을 숨기는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	
0413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돈의문 뉴타운 상가세입자 분신사망 관련, 뉴타운 강행 중지 요구	
0512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행복주택 공급 확대 이전에 공공주택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519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관련, 실효성 있는 전월세대책 마련 요구	
0531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시세를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 산정 중단, 실거래가 전환 필요	
0601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정책 논평	
0628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 발표 관련, 후분양제 이행 등 근본 대책 마련 촉구	
0708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철산대교 붕괴는 정부의 부실시공 목인이 초래한 인재	
0826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 주택가격 상승만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	
1103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땀질 처방에 그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0126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고 공농성 환경운동가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 한 논평	
0219	정책성명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 업계획, 총체적 부실의 결 정체 원점 재검토하라!	
0222	성명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부산 기장군민들의 해수 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	
0302	정책발표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암예방 특별법 발표	
0310	정책발표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건설중단으로 2040년 원 전 ZERO 실현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321	정책발표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동물복지법 제정, 중앙 동물보호국·지자체 전담부서·동물구조찾라인·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우리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등 발표	
0526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물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0614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1229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문화재위원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환영 논평	
0504	정책브리핑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주요내용과 문제점	
0512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유원지특례 ‘제주도특별법’ 기습처리가 ‘협치’인가	
0518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주민번호 제한적 변경허용은 대안 아니다	
0704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돌려막기식 지방재정개혁안은 ‘하수 중의 하수’	
0812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치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 더 확대돼야한다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112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의당의 정치혁신 제안] 금권·특권·반칙·표절·갑질 없는 5무(無) 국회를 위해 '국민 눈높이 공천'과 '공천 무한책임제' 제시	
0217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의로운 경제론」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0222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대한민국의 5대 기득권 해체」 “국민의 모습을 닮은 정의당이 불의한 5대 기득권을 해체하겠습니다”	
0224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의로운 복지론] 정의로운 복지 "OECD 평균 복지국가" 질 좋고 공평한 복지를 추구하는 복지국가 2.0 버전	
0226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의로운 주거」 반값 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주거비 지원,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확대	
0302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국토환경공약] 4대강 복원, 발암물질 걱정없는 대한민국 생명의 강을 되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0303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중소상공인공약] 「맘 편히 장사하는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 지킴이, 정의당 재벌 대기업에 맞서 골목경제와 서민경제를 지키겠습니다.	
0307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여성공약] '여성이 마음껏 일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308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조세·재정공약] 튼튼한 재정으로 복지확대, 공평과세로 격차해소, 부의대물림 막고 서민지갑 채우는 조세재정 개혁	
0309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노동공약]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막고 노동존중을 실현하겠습니다	
0309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보육공약] 2대 국가책임제로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보육」	
0309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교육공약] 수저계급론 없는 대한민국	
0309	정책브리핑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빈민공약] 「노점과 지역의 상생」 노점상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0310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한국탈핵 2040	
0311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보건의료공약] 메르스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민낯!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대개혁」 정의당이 보건의료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0315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의당의 20대 청년공약] “청춘, 걱정하지 말아요”	
0316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4대 혁신농정」 우리농업을 지키고 농민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316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장애인공약] 펼쳐 수준의 장애인복지를 OECD 평균 국가로 장애인 권리보장'5대 비전 20대 정책'	
0317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국방공약>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비핵평화 보장	
0318	정책브리핑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인권소수자공약] 인권 존중, 정의로운 대한민국	
0321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외교·통일 분야 공약] “평화·상생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중견·평화·가교 국가」의 비전과 과제	
0321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지방자치 균형발전 공약] “자치와 균형의 미래전환”	
0322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동물복지공약]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0322	정책브리핑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복지일반 공약] OECD 펼쳐 국가에서 “OECD 평균복지국가로”	
0323	정책브리핑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안전 공약」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0323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문화예술공약] 문화예술의 정의로운 전환	
0328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노동과 시민을 위한 「언론독립 공정보도」 언론 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0329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ICT공약]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ICT 생태계 조성」 노동과 시민이 행복한 정보인권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330	정책브리핑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과학기술공약] 「국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 과학기술인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환경부터 만들겠습니다	
0330	정책브리핑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노인공약]누구나 불안한 노후에서 “모두가 여유로운 노후로”	
0330	정책브리핑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아동청소년공약] “아동 청소년 인권국가” 실현	
0401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정의당 20대 총선공약집] 발표	
0407	정책브리핑	언론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카드뉴스 제작	[4시4철 공약] 새누리당 민생공약 vs 정의당 10대 민생공약	
0407	정책브리핑	언론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카드뉴스 제작	[4뿐4뿐 공약]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에는 없고 '정의당에만 있는 10대 공약'	
0408	정책브리핑	언론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카드뉴스 제작	[4고뭉치 공약] 반드시 저지해야 할 새누리당 12대 공약 + 5대 정책	
0411	정책브리핑	기자회견, 언론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20대 국회 우선추진 10대 입법과 막아야 할 새누리당 10대 악법」	
0712	정책논평	언론 배포	LG CNS 농업진출 반대	
0630	정책논평	언론 배포	농어촌공사 영터리 조직통합 철회해야	
0725	정책논평	언론 배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농지법 위반과 농지보존	
0728	정책논평	언론 배포	김영란법, 추석 경기 우려된다	
0818	정책논평	언론 배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기대와 염려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824	정책논평	언론 배포	식중독과 학교급식, 배식봉사 보다 검수봉사가 필요하다	
0830	정책논평	언론 배포	청탁금지법 피해대책,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특별법이 해답이다	
0912	정책논평	언론 배포	쌀값폭락,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0913	정책논평	언론 배포	채소값 폭등 문제, 제도를 안바꾸면 해결 못한다	
0923	정책논평	언론 배포	진업진흥지역 해제는 쌀값폭락 대책이 아니라 농업포기 정책이다	
1101	정책논평	언론 배포	최순실에 사업권 넘기고 장관 된 김재수 농림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1229	정책논평	언론 배포	2017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농민없는 정책이다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74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125	토론회자료	누리과정 중장기 대안 모색	자체발간	100부, 토론회 참석자 배부	
0129	토론회자료	2016년 한국정당 정치의 위기와 대안	자체발간	100부, 토론회 참석자 및 당원 배부	
0212	토론회자료	논란의 청년정책, 첫 단추를 다시 꿰다	자체발간	150부, 당 정책으로 활용	
0304	도서	2016년 당원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분석	자체발간	200부, 당원 및 지도부 배부	
0325	토론회자료	5시 퇴근법	자체발간	100부, 토론회 참석자 배부 및 당 정책으로 활용	
0929	토론회자료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자체발간	100부, 토론회 참석자 배부	
0929	토론회자료	4.13총선의 호남표심 및 전망	자체발간	100부, 토론회 참석자 및 당 지도부 배부	
1005	연구자료	기본소득	자체발간	10부, 당 정책으로 활용	
1107	연구보고서	기본소득	자체발간	50부, 당 정책으로 활용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211	기사	온라인을 뒤덮는 혐오,이대로 괜찮은가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215	기사	아프니까 청춘인가? 청년들이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217	기사	실망사회-희망과 낭만이 사라진 사회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217	기사	사회가 내게 공무원을 권한다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및 프리티안 공동게재	
0218	기사	단군 이래 최고 스펙, 토익 900점?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및 프리티안 공동게재	
0222	기사	[르포] “소녀상 옆 대학생 농성단” 외로운 소녀상, 외롭지 않은 그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226	기사	PRIME코어사업 ‘취업률 중심의학과 개편’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226	기사	문화를 팝니다. 인문학 카페 36.5도를 만나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229	기사	S대 독문과, 1992년과 2014년 졸업생 비교하니...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및 프리티안 공동게재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302	기사	아침이 있는 삶을 꿈꾸는 대학생들 총학생회 선거에 등장한 '1교시를 9시 반으로!'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304	기사	우리들의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되었나①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307	기사	한국의 안나 튀어만이 필요하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308	기사	우리들의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되었나②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309	기사	[칼럼] 청년예비후보, 정말로 청년을 위하나?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311	기사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전해라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314	기사	미국의 LA, 한국의 수원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314	기사	국회 무급 경력이 '취업' 스펙?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및 프래시안 공동게재	
0315	기사	서울시, 성남시 청년수당(배당) 지급 논란, 청년들의 생각은?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316	기사	드라마 속 지배자 VS 지도자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518	기사	영화관 알바, 너희는 을이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608	기사	[칼럼]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폐지안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720	기사	[여영국 경남도의원 현장 인터뷰] 경남도민에 대한 홍지사의 폭정을 알려 나가겠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721	기사	‘대 2병’부터 ‘헬조선’까지, 어람나 더 힘들어야하나!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722	기사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말하는 “빛져야 파이팅”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725	기사	한국 음악교육의 현 주소, 무엇이 문제인가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726	기사	영국총리도 몰랐고, 국민도 몰랐습니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727	기사	대한민국 국회의원 청년 비서를 만나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727	기사	청년문제, 관점은 확고하되 시야는 넓어야죠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을 만나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729	기사	대학교 내 장애인 복지, 아직 어린 아이 수준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729	기사	누구를 위한 맞춤형 보육제도인가?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801	기사	공동체의 붕괴와 혼자서 살아가기-1: Stand Alone complex: 혼자서도 잘해요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801	기사	공동체의 붕괴와 혼자서 살아가기-2: 솔플족, 안녕들 하십니까?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803	기사	오늘도 편견의 코르셋을 입으셨나요?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및 프레이션 공동 게재	
0809	기사	‘걸크러시’ 유행의 숨은 얼굴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809	기사	여성의 것아닌 여성의 것을 되찾고 싶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812	기사	청년문제 해결, 그 이상을 바라보다 -대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812	기사	기억교실, 아이들이 돌아 왔어야 할 공간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및 프레이션 공동 게재	
0822	기사	고시원, 하숙 전전하는 대학생, 진짜 원인은?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및 프레이션 공동 게재	
0823	기사	[노창섭 창원시의원 인터뷰] 로컬푸드 전도사 노창섭 창원시의원을 만나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823	기사	최저임금, 6470원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824	기사	평화나비, 알바노조를 만나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및 프레이션 공동 게재	
0825	기사	데이트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826	기사	[청춘필담] '대나무숲'은 왜 청년 세대의 안식처가 되었나?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826	기사	청년들은 왜 '대나무숲'에 기대게 되었나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908	기사	깃뽀히는 사립대 대학 민주주의... 지금 동국대에선 무슨 일이?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908	기사	성차별적인 용모 규정, 이제 그만!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909	기사	세대공감,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909	기사	청년 예술가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0909	기사	인턴제, 청년의 삶을 돈으로?... 거부하라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및 프레이션 공동 게재	
1005	기사	[이영재 대구북구의원 인터뷰] 풀뿌리정치 국가대표 이영재 구의원을 만나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1005	기사	전주 티브로드 해고노동자들의 끝나지 않은 싸움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1006	기사	세대공감,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② 대한민국 30, 40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은 우리시대에서만 가능했던 일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007	기사	사령관님, 당신은 그렇게 멋있게 전역해서는 안됩니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1010	기사	Stand Alone Complex2: 우리 청춘, 만남 is 뭔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1012	기사	세월호 본질은 ‘생명’, 미수습자 우선되어야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및 프레이션 공동 게재	
1017	기사	생활정치의 달인, 일당백 엄정애 의원을 만나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1025	기사	성 소수자 낯설지 않은, 익숙한 존재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및 프레이션 공동 게재	
1107	기사	아현동 행정대집행, 용역업체 계약 과정 문제 의혹 드러나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1111	기사	젊고 유쾌한 동네 청년, 김성년 의원을 만나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1115	기사	2016년 헬조선 ‘극한 알바’ 6인의증언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및 프레이션 공동 게재	
1121	기사	[르포] “우리 모두가 백남기다!” 분노한 시민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1124	기사	세대공감, 개천에서 용 나는사회③ 50-60대 한국에서 아직 개천의 용이 날 수 있다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1212	기사	지역청년단체가 말하는 정치	외부용역	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0314	도서 (정강정책홍 보물)	정의당 20대 총선정책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체발간	1,000부/당원 배포	
0401	도서	제20대총선 정의당 정책공약집 '정의로운 대한민국' (1권: 분야별 공약 2권: 대표 및 특화공약)	자체발간	1,000부/ 시도당 및 후보 배포, 판매	

바. 그 밖의 주요활동(18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0109	한국철도공사 대전본부	미래리더십 스쿨 (부산, 광주권 2강)	-막스베머는 진보적 청년 들에게 정치에 대해 어떻 게 얘기했나  -진보정당의 역사와 과제	
0116	부산 동아대학교  광주 윤한봉기념사업 회	미래리더십 스쿨 (부산, 광주권 3강)	-민주적 정당정치론 -정치적 말의 힘  -의회정치 다시보기 -정치와 복지국가	
0123	광주 윤한봉기념사업 회  부산 동아대학교	미래리더십 스쿨 (부산, 광주권 4강)	-민주적 정당정치론 -정치적 말의 힘  -의회정치 다시보기 -정치와 복지국가	
0130	한국철도공사 대전본부	미래리더십 스쿨 (부산, 광주권 종강)	-새로운 노동운동이 바라 본 한국정치  -졸업식	
0320	광주 윤한봉기념사업 회	미래리더십 스쿨 (광주권-보충강의)	-한국경제와 복지국가	
0105	중앙당 회의실	청년기자단2기 발대식	-운영방향 안내 및 소장강 의 -기자 멘토 지정 -위촉장 수여 -당대표 인사	
0119	중앙당 회의실	청년기자단2기 1차 기획회의	-현직 기자 교육 -청년부대표 및 청년학생 위원장 만남의 장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0202	중앙당 회의실	청년기자단2기 2차 기획회의	-유시민 작가와의 만남 -중간평가 -민원수렴	
0229	중앙당 회의실	청년기자단2기 해단식	-최우수/ 우수 청년기자 시 상식 -2기 해단식	
0121	중앙당 회의실	연구소 제9차 이사회	-2016년 연구소 사업계획 안 심의·의결 -2016년 결산안 및 2016 년 예산안 승인	
0627	국회 본청 223호	청년기자단3기 발대식	-정의당 및 미래정치센터 소개 -운영계획 오리엔테이션 -현직기자의 기자단 교육① -새내기 기자들의 처음 기 사쓰기 -발대식 및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원내대표/부대표 인사말	
0713	국회 본청 223호	청년기자단3기 1차 기획회의	-현직기자의 기자단 교육② -정치와 언론, 기자정신 -정의당 청년정치인과의 만 남	
0817	국회 본청 223호	청년기자단3기 2차 기획회의	-현직기자의 기자단 교육③ -1차 중간평가 및 민원수 렴	
1017	국회 본청 223호	청년기자단3기 3차 기획회의	-정의당 국회의원과의 만남 -2차 중간평가 및 민원수 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1206	중앙당 회의실	청년기자단3기 해단식	-특강 -최우수/우수/정의기자 시 상식 -해단식 및 격려사	
0715	중앙당 회의실	연구소 제10차 이사회	-2016년 하반기 사업계획 안 심의·의결 -2016년 상반기 결산안 및 하반기 예산안 승인 -상반기 진행사업 보고	
0825	중앙당 회의실	연구소 제11차 이사회	-소장 선출·의결의 건 -기타안건	
1006	중앙당 회의실	연구소 제12차 이사회	-부소장 선출·의결의 건 -기타안건	

# 주제 :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연구기간 : 2016년 7월 11일 - 8월 23일 (43일)
- 연구분야 : 정무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은행 매각의 문제점을 연구
- 연구내용
  - 조급한 매각은 정부 스스로 정한 ‘공적자금회수 극대화’ 원칙과 충돌
  - 우리은행 매각이 금융산업 발전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를 더욱 높여 경쟁도가 약화될 가능성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에 위반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수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심화
  -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우리은행을 국유 은행으로 존치시키는 방안도 고려대상
    - 매각방식으로 과점주주보다는 국민주방식이 앞서 언급한 매각의 문제점들을 축소
    - 매각 시점은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위해 시장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 매각할 필요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6년 8월 24일 - 9월 21일 (28일)
- 연구분야 : 정무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연구내용
  - 납세자보다 주주와 다른 채권자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손실분담원칙을 위반하고 바젤Ⅲ에서의 자본규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금융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고 적합한 지원방식을 결정하며 사후관리하는 것을 제약 뿐만 아니라 중간 참여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고유기능인 중소기업 대출과 보증업무가 저해될 가능성 있음
  - 원칙적으로 ①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아닌 재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 대비해 열어둔 수출입은행 출자 역시 재정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③ 만약 한은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가계부채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6년 9월 22일 - 10월 31일(39일)
- 연구분야 : 정무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취약성을 살펴보고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내충격성 강화방안, 채무자 보호 강화방안,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 ○ 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급증은 주택 및 전세 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택 및 전세가격 상승은 저금리와 관련이 있음
-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내충격성 강화를 위해서는 신용 이용가능성 규제 강화 및 서민금융 확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 채무상환능력 제고 등이 필요
-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최고이자율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 실행 제한 및 채무자 책임 한정, 은행의 지명채권 양도 제한,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성화, 금융교육 및 신용상담 강화 등이 필요
- 구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잔여채무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개인회생 기간중 담보부 채무의 별제권 실행 연기,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규정 전면 재검토, 파산절차에 중지명령 도입, 면제재산 증액, 면책대상채권 범위 확대 등이 있음

###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공무원 성과평가제 확대의 문제점** **분석**

- 연구기간 : 2016 년 1월 1일 - 2016 년 1월 7일(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공무원 성과평가제 확대의 문제점 분석
- 연구내용: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성과평가제 확대는 기본적으로 성과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결여, 민간기업 방식의 무리한 적용에 따른 책임행정 약화, 성과와 보수·승진체계 간 연동에 따른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 공무원 성과 강조를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엄격한 분석을 토대로 실무자들이 합의할 만한 성과 기준이 만들어져야 함. 동일직무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으로 그 바탕 위에 성과급 제도가 강화되어야 함
- 연구성과: 1월 2-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 주제 : 미래부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개선방향 제안

- 연구기간 : 2016 년 1월 4일 -    년  1월  7일(4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미래부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안
- 연구내용: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 역시, 막대한 예산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투입하고 도 여전히 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저생산성 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럼에도 전체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가 세계5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 수준 인 것은 양적 투입과 성과가 주된 평가지표로 되어 있기 때문임. 이는 국가전체의 과학기술·R&D 혁신 노력을 감소시키게 함. 질적 성과 지표를 추가·보강하는 등 혁신 노력을 자극하는 평가지표의 대대적 개선이 요구됨. 현재 우리나라 R&D 국가혁신 경쟁력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에서 찾을 수 있음
- 연구성과: 1월 2-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 주제 : 정부부처-민간기업 간 교류의 문제점 분석

- 연구기간 : 2016 년 2월 10일 -     년 2월 19일(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정부부처-민간기업 간 교류의 문제점 분석
- 연구내용: 민간근무휴직제는 관료 역량 강화 보다 민관유착의 폐해가 더 큼. 4급 공무원이 민간기업 업무를 통해 정부관료로서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료사회 전반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정부와 기업은 존재이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임. 정부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감시하며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임.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빠르게 발전하는 기업의 기술과 시장에서의 입장변화를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는 공무원 개인을 기업에 파견하여 근무 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개인의 진로와 경력을 위해 활용할 유인이 더욱 큰 제도라고 여겨짐. 이런 맥락에서 민간근무휴직제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설계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연구성과: 2월 2-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 주제 : R&D 실패 연구비 환수의 문제와 개선방향 -실패의 수용과 자산화 관점

- 연구기간 : 2016년 2월 16일 - 2016년 2월 19일(4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연구개발 실패한 서울대에 정부출연금 14억 환수 판결의 문제점 및 연구실패의 수용과 자산화 관점에서 향후 연구비 선정과정 및 환수제도 개선방향 제안
- 연구내용: R&D사업의 고유 특성은 불확실성과 성패 판단기준 모호성에 있음. 연구개발 책무성 전제 도전적·모험적 연구의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함. 실패의 자산화 관점이 요구됨. 건전한 실패를 허용하되, 연구과정과 실패·성과의 면밀한 정리 및 공개, 전문가 평가 절차를 마련해야함. 현재 중대형-장기연구사업 선정과정이 부실한데 선정 핵심전문가의 역량강화와 숙의가 필요함
- 연구성과: 2월 2-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 주제 : 박근혜 정부 3년 평가보고서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 연구기간 : 2016년 2월 1일 - 2016년 2월 24일(24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통계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3년을 평가함
- 연구내용 :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서민과 청년의 삶이 더욱 팍팍해졌음. 청소년 마약사범, 가정폭력, 성폭력 범죄가 늘면서, 가정과 사회도 더욱 무섭고 불안해졌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의 부채가 늘어, 나라의 살림살이도 더욱 팍팍해졌다.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상징인 지방자치도 후퇴하였음. 통계로 본 박근혜 정부 3년, 대한민국은 더욱 일그러진 자화상을 하고 있었음
- 연구성과 : 연구소 연구보고서로 제출하고 보도자료 배포함.

## 주제 : 해외 여론동향(2월 2-3주차)

---

- 연구기간 : 2016 년 2월 13일 -    년 2월 19일(7일)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2월 2-3주차 해외 여론동향을 조사 및 발표함
- 연구내용: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 분석, 세대간 대결 경쟁, 각종 대선정책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 연구성과: 2월 2-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 주제 : 국내 여론동향(2월 2-3주차)

---

---

- 연구기간 : 2016 년 2월 13일 -    년 2월 19일(7일)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목적: 2월 2-3주차 국내 여론동향을 조사 및 발표함</li><li>○ 연구내용: 박대통령 국회연설 평가, 2월 2주차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li><li>○ 연구성과: 2월 2-3주차 분야별 이슈&amp;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li></ul>

# 주제 : 외교부 저성과자 해고의 문제점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3월 1일 - 2016년 3월 3일(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외교부 저성과자 해고의 문제점 분석

○ 연구내용: 최근 청와대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해 대국민 서명을 전개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그러는 와중에 정부 내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저성과자 해고’가 바로 인건비 때문에 해고를 쉽게 하고, 사측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인사 조치를 단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킴. ‘저성과자 해고’가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의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정부가 실상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함에 있어, 그리고 업무 중요도와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보여준 유일한 기준은 ‘돈’과 ‘복종’이었음. 이러한 시각을 가진 정부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 이것이 실제 현장에 적용 됐을 때 기업들이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무기를 휘두를 경우, 우리나라 노동자 전반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업무행태가 야기될 것임. 그렇게 될 경우, 이는 경제성장 방안은커녕 한국 사회 전반에 제 2의 세월호와 메르스 참사를 야기하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임

○ 연구성과: 3월 1-2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 주제 : 해외 여론동향(3월 1-2주차)

- 연구기간 : 2016 년 3월 1일 - 2016 년 3월 3일(3일)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3월 1-2주차 해외 여론동향을 조사 및 발표함
- 연구내용: 미국 대선 공화당·민주당 경선과정 분석, 일본 여론, 영국 여론
- 연구성과: 3월 1-2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 주제 : 국내 여론동향(3월 1-2주차)

---

---

- 연구기간 : 2016 년 3월 1일 - 2016 년 3월 3일(3일)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목적: 3월 1-2주차 국내 여론동향을 조사 및 발표함</li><li>○ 연구내용: 필리버스터관련 여론조사, 3월 1주차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li><li>○ 연구성과: 3월 1-2주차 분야별 이슈&amp;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li></ul>

# 주제 : 미래부 ICT R&D 투자로드맵 수립에 대한 비판과 구조적 개선방향 제안

- 연구기간 : 2016년 3월 1일 - 2016년 3월 3일(3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미래부에서 발표한 ICT R&D 투자로드맵에 대한 비판과 투자결정 구조의 개선방향 제안

○ 연구내용: 기존에 과학기술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문제제기 했던 우리나라 R&D 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주도의 R&D 중점투자영역 및 투자전략 수립과 단기 성과 위주 정책이었음. 이번, ICT R&D 투자로드맵 2020 마련 과정에서도 미래부 주도의 5년 의 단기성과 전략임. 과거에 주로 고질적으로 문제되었던 구조적인 정부주도 단기성과 위주 R&D 정책결정 방식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 선정된 기술을 보면, 관광정보 서비스, 건강정보 빅 데이터, 초고화질 송출, 장애인 방송, 헬스케어/의료 보안, 사회안전 감시시스템, 재난 방송 등은 정부 주요 관심 분야로, 직접적으로 성과가 나왔을 때 전략적인 정책 홍보가 가능한 분야임. 또한 주요 기술들이 대부분 기초·원천기술이 아닌, 응용 혹은 상용화 단계의 기술개발임.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R&D 투자방향은 기본적으로 기초·원천기술이 주가 되어야 하며, R&D 지원의 시계는 5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아야 함.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기존에 미래부 주도 한시적 로드맵 추진위를 통한 R&D 중점투자 영역 및 방향 결정 구조의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 미래부 등 정부부처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시키기 위해 민간위원장 중심의 상시적 범정부 과학기술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며, 정부위원은 장·차관급이 아닌 실무자 위주로 구성하고, 결정 및 참여 제한 등 결정구조가 재정립되어야 함

○ 연구성과: 3월 1-2주차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 주제 : 균형·발전의 상생 지향 목적의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선방향 제안

- 연구기간 : 2016년 3월 7일 - 2016년 3월 8일(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의당 차원의 지역발전 논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를 구상하고 구현시킬 초석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 및 문제점 분석, 개혁방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정의당과 기존 진보진영이 사회적 경제를 넘어서는 지역발전 의제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음. 그래서 정의당이 지역발전을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를 구상하고 구현시킬 초석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었음. 지특회계는 2005년 균형발전특별회계(노무현정부)로 시작해,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명박정부), 2014년부터 현재의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모되었으며, 각 변화과정별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였음. 지특회계의 문제점으로 균형발전 부재, 재원증가 담보, 국고보조사업 성격 잔존, 지자체별 재정여건 미감안 동일한 보조율 설정, 지역발전 추진역량 부재, 부지매입비 지방부담 등이 지적되었음. 향후 지특회계 개혁방향을 제시하면서, 거시적 목표는 '균형과 자율(발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균형적 지역발전 지향'으로 설정하고, 회계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계정명을 생활기반계정을 지역(자율)개발계정, 경제발전계정을 균형발전계정으로 전환한 것을 제안하였음. 구체적인 개혁방향으로 재원규모의 점진적 확대, 진정한 포괄보조금화, 재정여건 감안 차등보조율 설정, 성장촉진지역 지역발전 추진역량 및 부지매입비 일부지원 등을 제안하였음.

○ 연구성과 : 연구소 칼럼으로 제출함.



## 주제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갈등의 문제점

---

---

- 연구기간 : 2016년 5월 10일 - 2016년 5월 19일(10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문제점 분석
- 연구내용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은 무분별한 공공기관 설립에 따른 막대한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인건비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 총액인건비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성과연봉제로 부채감소나 효율화는 불가능하며 사실상 퇴출제로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공조직의 성과는 제대로 측정할수도 없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도 어려움. 해외에서도 결국 실패를 노정하고 공공성이 상실된 바 있음. 공공기관에서 잘한다는 개념은 대국민선비스를 잘한다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이슈페이퍼로 제출함.

# 주제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갈등의 해결방향 제안 -공공성·민주성 제고 방향

- 연구기간 : 2016년 5월 10일 - 2016년 5월 19일(10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갈등의 해결방향 제시
- 연구내용 : 공공기관 성과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방향이 요구됨. 우선, 각 기관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공동 연구단(TF)을 꾸려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호봉(+수당)과 성과급의 비중)을 결정 할 수 있게 해야 함. 둘째, 공공기관의 성과는 대국민 서비스 평가와 청렴도 평가가 핵심이 되어야 함. 셋째, 성과급의 출발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측정이 전제되어야 함.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성과급제도의 설계를 위해 기관 과 부서의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해야하고, 객관적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함. 마지막으로, 성과연봉제와 같이 지나친 금전적 개인별 차등 폭을 설정하는 인사제도보다 집단성과 보상프로그램을 조화시키고, 비금점적 보상을 포함한 총 보상을 고려하는 등 기관 및 사업의 특성, 직무, 직종, 환경 에 적합하게 설계 및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이슈페이퍼로 제출함.

# 주제 : 민주화 이후의 지방자치 - 근 20년의 지속적 발전과 최근 3년의 급격한 후퇴, 향후 발전의 길

- 연구기간 : 2016년 5월 27일 - 2016년 6월 2일(8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민주화 이후의 지방자치 발전과정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10대 후퇴·과피실정을 지적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의 길을 제안함
- 연구내용 :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이후, 지방분권 확대, 주민참여 증대와 더불어 근 20년 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음. 특히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실시하고, 참여정부 기치를 내걸며, 시민참여 역량증진 및 제도화에 역점을 기울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였음.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정치를 통해 중앙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치권(입법·행정·조직·재정)을 총체적으로 침해하면서 지방자치는 후퇴일로로 거듭하고 있음. 향후 사무·재정 4할 자치, 지방재정 영향 정책결정 및 지방세 세목·세율결정권의 지자체협의체 이양이 필요함. 보조금외 재원사용은 지방 자율로 맡기고, 재정책임도 지방 몫으로 해야 함. 지자체 책임성 제고는 지방의회 역량강화, 주민참여 증대,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주민참여제도 기준 완화 등으로 가능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칼럼으로 제출함.

# 주제 :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의 국내 지역분원 운용의 문제점과 해외사례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7월 1일 - 2016년 7월 20일(20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국내 지역분원의 문제점 분석과 해외사례 검토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국내 지역분원을 지적하고 실 제 예산낭비 및 연구기능 분산에 따른 연구효율성 저하, 지역의 산업경제적 기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지역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연구비 부족, 사업 기획 및 예산 운영 자율권 부재, 지역 분원장의 지역수요 반영 자율성과 재량권 부족, 본원과 분원의 역할 미정립 등으로 분석 하였다. 과학기술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의 시사점은 첫째, 지역분원의 높은 자율성과 책 임성,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재정 지원, 둘째, 지역분원의 특화된 기능별 차별화된 정책지원(재원/인력), 셋째, 다양한 지역 대학·산업간 연계 프로그램 등 중간지원조직 역 할 등을 하고 있었다.
- 연구성과 : 연구소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 주제 :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의 국내 지역분원 운용의 개선방향 제안 -지역의 산업·경제적 기여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6년 7월 1일 - 2016년 7월 20일(20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국내 지역분원 운용의 개선방향을 지역의 산업·경제적 기여를 중심으로 제안함</li>   <li>○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우선 출연(연) 지역분원의 유형을 4가지로 재정 리하고, 본원(중앙정부 재원 바탕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R&amp;D역량 강화, 기초·원천연구 중심)과 분원(중앙·지방 공동재원, 지역 산업경제 기여, 지역산업 간 연계협력, 응용·사업화 연구 중심)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향후 정책과제로 1)지역R&amp;D포괄보조금 도입, 2)지역R&amp;D거점기관 선정, 3)기능별 맞춤형 정책지원 및 관리감독, 3)혁신주체간 다양한 연계협력제도 활성화, 4)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 강화, 5)권역·광역별 산학연 네트워크 관리, 6)목표관리제 도입 등을 제안했음</li>   <li>○ 연구성과 : 연구소 연구보고서로 제출함.</li> </ul>

## 주제 : 노벨과학상 미배출 원인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7월 25일 - 2016년 8월 2일(10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벨 과학상이 나오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기술 R&D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함. 선진국의 과학기술 R&D 지원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이상적 R&D 구축 방향을 제안함.
- 연구내용 : 노벨 과학상 미배출 원인을 정부 기초과학 투자와 인력양성 문제를 제기함. 한국 과학기술 R&D 지원의 문제점을 정부주도 일방적 시혜적 지원, 추격형 및 단기 성과창출 지원 집중 등 도전적·창의적 연구의 부재를 지적함. 창의적·고위험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선진국 과학기술 R&D 지원체계를 소개함. 향후, 기초연구 중심 가치사슬 단계별 전방위 지원, 연구기관(연구자) 자율성 확대, 양질연구 판단·평가능력 향상 및 평가제도 개선,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인력양성 체계 내실화·다양화, 이상적 R&D 구축모형을 제안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칼럼으로 제출함.

# 주제 : 법치의 개념 정립 -박근혜·노무현 대통령 법치 인식 비교

- 연구기간 : 2016년 8월 1일 - 2016년 8월 10일(10일)
- 연구분야 : 법제사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법치 개념의 오용을 지적하고, 박근혜·노무현 대통령의 법치 인식을 비교하고 서양 학계에서 논의되는 법치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함

○ 연구내용 : 법치에 대한 오해는 법치를 바로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바라보는 것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집행을 강조하는 것임. 그러나 법치란, 국가가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구속되는 것, 입법자(국회)와 집행자(행정부/대통령)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즉, 국가가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임. 박대통령은 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국민이 법 지키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의 지배(국가가 법 지키기)로 바라보고 있음. 법치는 민주주의 구현의 기본 요소다. 최고권력자의 법치에 대한 인식을 민주주의 수준이라 본다면, 어찌면 후퇴하고 있음. 법치는 1)상설법, 2)공정한 법정, 3)집행기제 등 형식적인 절차와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갖추었는가에서 1)법에 구속된 정부, 2)법 이전에 평등, 3)법과 질서, 4)공정한 정의, 5)인권(자연권) 보호 등 5가지 목표들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임. 결론적으로, 법치의 진짜 열쇠는 국민이 아닌, 국가가 법 지키라는 것임.

○ 연구성과 : 연구소 칼럼으로 제출함.

# 주제 : 전자정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림자 -전자결재로 국회인사청문회 무시하는 대통령

- 연구기간 : 2016년 9월 1일 - 2016년 9월 5일(5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내려진 장관후보자의 임명 강행 및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등에 대해 전자결재하는 등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함

○ 연구내용 : 전자결재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국한함. 최근에 국가 중대사에 이루어진 눈에 띄는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과 부적격 의견 담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이후 장관 임명 강행 전자결재라는 두 번에 걸친 행정행위는 대통령이 입법부(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임. 대통령의 정무직 장관 인 사에 대한 보다 높은 내·외부 견제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과 그 권능을 점차 확대해나가야 함. 먼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시, 부적격 판정이 이루어진 장관후보자가 발생할 경우에 현재와 같이 참고사항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됨, 대통령이 만약 부적격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과 관련 부처는 부적격 사유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해명서와 함께, 관련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장관직 업무수행계획서를 별도로 관련 국회 상임위에 제출토록 해야할 것임. 관련 국회 상임위는 이 해명서와 장관직 업무 수행계획서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1회의 추가적인 보충작업을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함. 현재 장관급 이상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차관급 이상, 전국단위 대 규모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 연구소 이슈페이퍼로 제출함.



## 주제 : 기본소득의 필요성

- 연구기간 : 2016년 9월 21일 - 2016년 9월 30일(10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다각적인 기본소득의 필요성 분석
- 연구내용 :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1)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2)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감소, 3)불안정한 노동시장, 4)소득보장제도 한계, 5)생애주기별 위기 등 5가지로 정리하여 분석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 주제 : 기본소득의 이론적 배경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1일 - 2016년 10월 5일(5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본소득의 이론적 배경을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함
- 연구내용 : 기본소득의 개념 및 원칙, 기본소득의 유형 등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정리 및 분석함. 기 시행 중인 유사기본소득으로써 양육수당, 기초연금 제도를 분석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 주제 : 기본소득의 국내외 사례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6일 - 2016년 10월 15일(10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본소득의 국내외 사례 분석
- 연구내용 : 기본소득의 국내 사례로 서울·성남·경기도의 청년수당(배당) 비교분석 및 충남 농촌형 기본소득 분석, 해외 사례로 미국의 마이너스 소득세 실험과 캐나다 기본소득 실험, 알래스카 기본소득,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핀란드 기본소득 논의 및 실험,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 등을 정리 및 분석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 주제 :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응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16일 - 2016년 10월 31일(16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이 되는 것들을 5가지로 정리하고 관련된 기본소득 관점의 논리적 대응 및 그 장점을 주장함
- 연구내용 : 기본소득의 쟁점을 1)기본소득과 소득재분배, 2)기본소득과 노동유인, 3)소득보장보다 고용보장, 4)기본소득과 세금부담, 5)기본소득과 여성 등으로 정리하고, 각각에 따른 기본소득 관점의 논리적 대응과 그 밖의 다양한 장점 등을 제시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 주제 : 기본소득의 구상과 전략

- 연구기간 : 2016년 11월 1일 - 2016년 11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의당식 새로운 기본소득의 구상과 전략을 제안함.
- 연구내용 : 정의당식 기본소득제를 생애주기적 차등과세 기본소득제로 명명하고, 수혜 대상 및 예산소요액, 재원마련 방안 등을 제시함. 고소득자에게 까지 기본소득을 줄 필요가 있냐는 것에 캐나다의 세금환수제도(claw-back)를 벤치마킹하여 8,8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고, 최고 구간 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액의 절반을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함. 그리고 향후 기본소득의 확대 혹은 타 복지제도와 의 우선순위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지점을 제시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 주제 : 박-최 게이트와 거버넌스 붕괴, 거버넌스의 틀 및 대통령 하야 제안

- 연구기간 : 2016년 11월 1일 - 2016년 11월 8일(8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거버넌스 붕괴 상황을 심각히 제기하고, 좋은 거버넌스의 6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붕괴 상황을 분석하고, 대통령 하야를 제안함
- 연구내용 : 박대통령을 이용해 최순실 씨가 벌인 각종 국정 농단들은 나름대로 유지해왔던 국가거버넌스를 송두리째 흔들어 붕괴시키고 말았다 박대통령 집권 기간 가장 나쁜 거버넌스로 전락했음. 좋은 거버넌스는 1)최소의 도덕성과 공무원 정신, 2)좋은 의사결정과 합당한 이유 제시, 3)선행의 원칙, 4)효율성, 5)법치와 공명정대, 6)안정성 등임. 효율성과 법치 측면에서 볼 때, 약탈정권의 국가약탈 상태임. 국가 거버넌스 붕괴 상황에서 재건을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충분조건이 박대통령의 하야 뿐임을 제안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칼럼으로 제출함.

## 주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분석 - 경제규모·국민피해액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11월 1일 - 2016년 11월 8일(8일)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경제규모 및 국민피해액을 분석함
- 연구내용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는 대략 56조원 이상이며 국민피해액은 3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함. 이 35조원은 연 150~300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고교·대학 무상교육이나 전국민 무상의료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액수로 분석됨.
- 연구성과 : 연구소 연구보고서로 제출하고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함.

# 주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기업의 지하경제분석 -박-최와 대기업간 검은 거래와 국민손실액 추정

---

- 연구기간 : 2016년 11월 14일 - 2016년 11월 23일(10일)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최순실과 대기업 간에 이루어진 검은 거래와 국민손실액 추정을 통해 박-최 게이트의 지하경제 규모를 분석하고,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차단 방향 제시
  
- 연구내용 : 박-최 게이트와 대기업의 검은 거래 의혹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순이익과 지하경제 규모(국민손실액)을 추정했음. 삼성, 현대자동차 등 5대 주요 대기업들은 총 808억원을 투자 혹은 뇌물을 주고, 약 3조 7,858억원의 이익을 얻어, 결과적으로 약 3.7조원의 순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통해 박대통령과 대기업간 검은 거래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 혹은 국민손실액은 약 4조원 수준으로 추정했음. 이러한 5대 주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동원되고, 광고 및 납품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많은 돈을 내놓았지만, 그 이후 관련 기업에 정부의 정책지원 및 특별사면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토대로 재벌 대기업은 박-최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닌 검은 거래의 진짜 수혜자이자 공범자일 수 있으며,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박대통령이 실수로 언급한, ‘지하경제 활성화(?)’ 공약은 실현되었다고 평가했음.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준 기업이나 받은 정치인 모두에게 오고간 돈의 10배를 징수하는 뇌물10배부과제도, 대기업 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금지제도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연구보고서로 제출하고,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함.



# 주제 : 박-최 게이트로 인한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 국민피해액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12월 20일 - 2016년 11월 29일(10일)
- 연구분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사드배치 과정에서 최순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 국민피해액을 분석함. 사드배치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도입과정 및 이후의 절차적 문제와 북한방어 실효성을 제기하며 사드배치 중단을 주장함
- 연구내용 : 최순실이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적이 있으며 사드배치 결정 등 각종 무기거래 도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국정부는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반발하며, 유커의 강제 감축, 한한령 시행 등 한류 규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음. 중국의 한류 규제에 따른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국민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총 13조 1,939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중국의 한류 규제에 따른 국민피해액을 유커 감소(대중국 관광 유입) 피해액과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수출 피해액으로 나누어 도출했음. 사드배치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 도입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도입 이후의 북한방어의 실효성과 막대한 유지비용, 가시화되는 대중국 한류 문화관광 측면 국민피해액 13조원을 고려할 때, 향후 사드배치는 당장 중단 및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연구보고서로 제출하고, 보도자료 및 웹자보를 제작 배포함.

# 주제 : 국정농단과 낮은 정부신뢰 속 정부의 책무성 회복의 길 -고약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 적절한 처벌

- 연구기간 : 2016년 12월 10일 - 2016년 12월 14일(5일)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그나마도 낮은 정부신뢰가 붕괴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책무성 제고 및 정부신뢰 회복의 길을 제시함
- 연구내용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농단은 그나마 30%대를 유지하던 정부신뢰도를 크게 하락시킬 것임. 박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최악의 수준인 4~5%임. 이러한 낮은 정부신뢰와 국정지지율은 사실상 무정부사태라 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정부를 구현해내지 못하기 때문임. 정치의 본질은 권력이며, 이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함. 책무성은 권력 행사에 대한 제도적 제약과 감시를 위해 점검과 감독으로 설명됨. 정치학자 쉐들러(Andreas Schedler)는 책무성을 답변가능성과 집행 등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의미를 분석했음 이번 국정농단 사태 수습을 기회로 은폐되어 왔던 많은 것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고 특검을 통해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강력히 처벌이 반드시 행해져야 함. 그 길만이 정부의 책임성과 권위를 제대로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첫걸음이 될 것임.
- 연구성과 : 연구소 칼럼으로 제출함.

## 주제 : 자치법규과 신설의 문제점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12월 1일 - 2016년 12월 16일(1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 신설의 문제점 분석

○ 연구내용 : 자치법규과 신설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조례제정권·자치입법권을 매우 침해함. 지나친 자치법규 정비는 결국, 자치사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임. 자치법규과가 주로 하게 되는 주요 업무 중 1)사전 보고된 자치법규 통보 및 쟁점 발굴·검토, 2)자치법규 재의·재소 지원 및 현황 관리, 3)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4)자치법규정비에 관한 평가 및 포상 등은 헌법에 보장된 지자체의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까지 침해하여 사실상 지방자치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업무들임. 행자부의 자치법규과 신설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각종 자치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교부세 삭감조치 등 중앙정부가 돈을 쥐고 흔들면서 지자체를 장악하고자 하는 것임. 행자부가 명시하고 있는 자치법규과 신설취지인 법치주의 구현 및 성숙한 지방자치 지원의 정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임

○ 연구성과 : 연구소 이슈페이퍼로 제출함.

**주제 : 자치법규과 신설 갈등의 해결방향  
제안**  
**- 지방자치 파괴하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  
신설, 당장 중단해야!**

- 연구기간 : 2016년 12월 1일 - 2016년 12월 16일(1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 신설 갈등의 해결방향 제안</li> <li>○ 연구내용 : 행자부의 자치법규과 신설은 본 취지와 달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지방자치를 후퇴·파괴시키는 것임. 행정자치부는 당장 자치법규과 신설을 중단해야 함. 현재 선거의회과에서 사무관급 2명의 공무원이 자치법규를 총괄 및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조례규칙 심사·운영 지원, 자치입법제도 연구·개선 업무를 하고 있음. 현행 수준의 인력과 조직으로 자치법규 심사 및 정비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다만, 과의 명칭으로 볼 때, 자치제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기존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확대 대상 업무 중 ‘자치법규 관련 컨설팅 교육 지원’ 업무는 추가하여 인력을 1명 정도 증원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보임</li> <li>○ 연구성과 : 연구소 이슈페이퍼로 제출함.</li> </ul>

# 주제 : 박근혜-최순실문화농단: 근본·철학 없는 개입 -문화정책 4대 원칙 정립

- 연구기간 : 2016년 12월 19일 - 2016년 12월 28일(10일)
- 연구분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최순실 문화농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화정책의 4대 원칙 및 목표를 제안함

○ 연구내용 : 최순실이 차은택과 함께 펼친 근본조차 알 수 없는 문화정책은 교육문화수석, 문체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문화 관련 고위급 인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1만 여명, 문화창조융합벨트, 미르재단 설립, 지역문화제 개입 등 너무나 많음. 정의당은 문화정책의 원칙을 1)팔길이 원칙, 2)시간 원칙, 3)다양성 원칙, 4)파트너십 원칙 등 4가지 측면에서 접근 및 정립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문화정책의 목적이 문화예술(인)의 창의성 발현과 다양성 증대에 있음을 염두 해야 함.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문화정책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은 기존에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각종 문화예술 지원 예산에 대한 성과나 평가가 모호했기 때문임. 이러한 눈먼 돈의 향방을 결국 그들의 사익추구에 집중하게 한 결과로 나타났음. 가칭 ‘문화예술지원위원회’를 설립하고, 문화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다른 정책들처럼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기업·NGO·문화예술인 등을 대폭 포함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함. 문화정책의 목적이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 창출이 아닌, 창의성 발현을 위한 비주류 실험적, 아마추어 문화예술 작품의 지원과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이슈페이퍼로 제출함.

# 주제 : **법정 기본형 건축비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근거없이 부풀려져**

□ 연구기간 : 2016년 1월 2일 - 1월 7일(6일)

□ 연구분야 : 국토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부가 분양가 산정을 위해 매년 2차례 고시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소비자 바가지 분양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정 건축비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 제시

### ○ 연구내용

- 높은 법정건축비는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의 고분양가 책정을 유도하며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는 만큼 법정건축비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을 지적함. 이를 위해 건축비의 세부내역을 알 수 있도록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 대비표 등의 건축원가를 인터넷에 상시공개하고, 나아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세한 분양원가를 가공,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함 .

###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정부의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의 문제점 및 정의당 서민주거방안 제시

- 연구기간 : 2016년 5월 6일 - 5월 10일(5일)
- 연구분야 : 국토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방안 대책'의 문제점 지적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연구내용
  - 정부 대책은 민간건설사,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익을 떠받치기 위한 '부동산 부자' 특혜정책에 불과함. 집값거품 제거, 전월세가격을 떨어트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안정화 된 가격을 토대로 가파른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세입자의 과중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공정임대료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아파트 건축비 검증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7월 6일 - 7월 19일(14일)
- 연구분야 : 국토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강남권에서는 평당4천만원대까지 고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음. 이에 강남권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건축비 책정의 문제점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

### ○ 연구내용

- 주변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 막대한 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감추기 위해 원가와 상관없이 건축비를 부풀려 신고하여 주거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3개), 강북권 재개발 아파트(3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3개)의 건축비 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강남권 재건축 건축비는 강북의 1.5배, 기본형건축비의 1.8배에 달하며 총 6,500억원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현황 및 문제점

- 연구기간 : 2016년 11월 1일 - 12월 8일(1개월 8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2016년 5월 규제프리존 법안 발의 이후 네거티브 규제방식, 환경·안전·개인정보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 훼손, 대기업 특혜를 통한 사회양극화 심화, 불투명한 사업 기대효과로 인한 재정 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의 현황과 내용,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 연구내용

- I. 들어가며
- II. 규제프리존 추진 현황 및 사업 내용
  - 1. 정부 발표 내용
  - 2. 국회 법안 발의 내용
- III. 규제프리존의 문제점
  - 1. 국민기본권을 훼손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 2.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깊어지는 사회 양극화
  - 3. 명분은 ‘지역 살리기’, 실상은 사회 갈등 피해가기
  - 4. 불투명한 사업 기대효과, 우려되는 재정낭비
  - 5. 주요 분야별 규제특례의 문제점
- IV. 개선방안 - 올바른 지역균형발전의 원칙과 방향 정립
- V. 나오며

### ○ 연구성과

- 당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입법안 제시 및 중장기적 대안 제언)

# 주제 : 한일 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의를 해야..

- 연구기간 : 2016년 1월 2일 - 1월 7일(6일)
- 연구분야 : 여가위 등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 발표에 대한 절차적 부적절성에 대한 검토 및 당의 대안 제시

### ○ 연구내용

- 한일 합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와 쟁점에 대한 자료로, 이러한 합의 선언은 국제법상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기자회견 발표문 형식을 빌어 합의·타결함으로써 협상의 정체가 모호하며 구속력과 규범력이 의심스러움. 또한 피해 당사자들의 최종 입장 수용 없이 진행된 이번 양국 간의 합의 무효 선언과 함께 정의당은 재협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차후 당차원의 지속적인 대응을 검토하기 위한 것임.

###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20대 총선공약

- 연구기간 : 2016년 01월 01일 - 3월 08일(5일)
- 연구분야 : 여가위 등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현행 정책의 문제점 검토 및 향후 입법과제 및 정책대안 제시

#### ○ 연구내용

- 3대 대표공약(5대 정책과제 및 17대 공약)

#### 1. 질 좋은 여성일자리를 보장

- ① 돌봄노동자와 감정노동자의 처우개선
- ② 성별임금 격차 해소와 차별없는 고용

#### 2. 일·가정 양립정착으로 여성경력단절문제 해소

- ①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 실시
- ② 3대(임신, 육아, 돌봄) 휴가제 확대로 일·가정 양립 실현

#### 3.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 폭력 대응

- ① 신종 3대 폭력(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강화
- ②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 및 외모중심주의 개선

####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16년 6월 15일 - 6월 22일(7일)

□ 연구분야 : 정무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최근 국내 생리대 시장 업계 1위인 유한킴벌리가 6월부터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아 휴지, 심지어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기사화됨. 가격인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한 바 있으나 생리대 가격 및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

#### ○ 연구내용

-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청소년에게는 생리대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위한 대안 검토 및 생리대 가격 인하 유도를 위한 방안 모색(생필품 등의 광고비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 공개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가격인하 유도, 생필품, 의식주 등 민생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담합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을 위한 자료 검토

####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방안과 생리대 가격 안정화(안)

- 연구기간 : 2016년 6월 22일 - 6월 27일(6일)
- 연구분야 : 정무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생리대 가격의 과도한 인상 및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구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바,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각 단위의 대응 방안 및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의 쟁점 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함.

### ○ 연구내용

-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및 각 단위의 대응 및 저소득층 기준과 적절한 전달체계 및 비용추정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로 정의당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함임. 반값 생리대 추진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및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공정거래법 4조)\*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함.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스토킹 방지법안 검토

□ 연구기간 : 2016년 8월 01일 - 8월 10일(10일)

□ 연구분야 : 법사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현재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행위 제지가 어려움. 특정 유형의 스토킹에 대하여 현행법상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고유한 법익 침해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없음. 또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여러 차례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에 오른 바 처벌강화는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위기개입과 입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연구내용

- 기 발의된 정의당 안의 보안 사안 및 관련 입법에서의 보완점에 대한 검토로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및 수사기관 등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 교육, 스토킹 피해자 상담 및 심리지원 강화 등의 입법적 보완을 위한 안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가족돌봄휴직 확대 및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검토

- 연구기간 : 2016년 8월 01일 - 8월 10일(10일)
- 연구분야 : 여가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현재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행위 제지가 어려움. 특정 유형의 스토킹에 대하여 현행법상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정신적 고통을 비롯한 고유한 법익 침해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없음. 또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여러 차례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에 오른 바 처벌강화는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위기개입과 입법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연구내용

- 기 발의된 정의당 안의 보안 사안 및 관련 입법에서의 보완점에 대한 검토로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및 수사기관 등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 교육, 스토킹 피해자 상담 및 심리지원 강화 등의 입법적 보완을 위한 안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 연구기간 : 2016년 11월 01일 - 12월 08일(38일)
- 연구분야 : 여가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여성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재 여성들이 정치참여가 어려운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제도적 측면, 정당정치 현황을 살펴 각 측면들의 개선안 및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과 여성 정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 1. 여성과 정치

- (1) 여성의 정치참여
- (2) 여성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

#### 2. 여성정치참여의 현실

- (1) 한국의 낮은 성평등지수
- (2)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정치참여의 현주소

#### 3. 제도·여성정치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안

- (1) 제도상의 측면
  - ① 문제점
  - ② 외국의 선거법 제도
  - ③ 개선안
- (2) 정당정치 측면
  - ① 문제점
  - ② 해외 정당정치
  - ③ 개선안

#### 4. 소결

###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정의당의 국토환경정책-4대강 재자연화, 암 걱정 없는 대한민국

- 연구기간 : 2016년 1월 11일 - 1월 15일 (5일)
- 연구분야 : 환노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강 사업은 부실한 설계·시공으로 인한 대형 보의 안전성 문제, 정체수역으로 인한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주민피해 및 생태계 파괴, 졸속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건설공사의 비리담합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 이에 대한 대안마련.</li> <li>- 암 발생 원인은 흡연·식생활과 같은 개인생활습관에 관련된 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 및 환경 위험 요인도 높은 비중 차지. 그러나 발암물질을 포함한 발암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고 여러 행정부처가 관여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li> </ul> </li> <li>○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과 효과를 검토하여, 인공구조물의 해체,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여부를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4대강 복원 위원회’를 설치.</li> <li>- 위원회는 △ 인공구조물 중 건설 중인 댐, 기존 댐 연결 시설물에 대해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검증하고, 4대강 사업 이전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유지여부 및 유지관리방안 등의 사항 검토,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으로 4대강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및 문화재 복원 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li> </ul> </li> <li>-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을 통해 ·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암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 암예방연구센터를 두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암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암예방평가지표 개발 및 보급, · 암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위원회는 발암물질 취급업체의 발암물질 유통량·배출량 등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함.</li> </ul> </li> <li>○ 연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li> </ul> </li> </ul>

# 주제 : 정의당의 동물복지정책-“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복지를 통한 생명존중 사회실현

- 연구기간 : 2016년 1월 18일 - 1월 22일 (5일)
- 연구분야 : 농해수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문제는 우리사회를 들썩이는 빅 이슈가 되었음. 충격적 동물학대 사건들이 SNS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음. 구제역과 AI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실시한 살처분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분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제를 성찰하고 이제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정의당의 동물복지 정책 마련.</li> </ul> </li> <li>○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고, 형법상 재물에 해당. 이 때문에 누군가 타인의 동물에 해를 가한 경우 그는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왔음. 그러나 1988년 오스트리아와 1990년 독일, 2002년 스위스는 민법을 개정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람과 물건만으로 구분하던 이분법 체계에서 권리의 주체인 사람과 권리의 객체인 물건, 그리고 생명이 있는 동물이라는 삼분법 체계로 전환 필요.</li> <li>- 동물복지법 제정.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은 기본법이 아니라 일반법이라 타법에 대한 규율이 약하며,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도 부족함.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효성도 약해 규율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을 생명존중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그 위상을 격상시키겠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다른 동물관련 법안들도 생명존중의 원칙을 반영 필요.</li> <li>- 기타, 동물보호행정 강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등</li> </ul> </li> <li>○ 연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li> </ul> </li> </ul>

# 주제 : 정의당의 탈핵정책-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탈핵 비전 2040

□ 연구기간 : 2016년 2월 08일 - 2월 26일 (18일)

□ 연구분야 : 산업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2016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5주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발생 30주년이 되는 해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은 청정에너지라는 인식에서 위험한 에너지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환경성과 경제성,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에너지에 대한 국민여론 증대. 이에 대한 정의당의 탈핵에너지정책 마련.

### ○ 연구내용

-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통해 2040년 원전 Zero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작성
-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40% 수준으로 확대.
- 국민세금으로 메꿔온 대기업의 특혜성 전기요금 체계를 OECD 수준으로 정상화해 수요관리 정책 강화
- 위험도 높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방안.
-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국민식탁 보호에 관한 내용 마련.

###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정의당의 에너지정책: 제20대 총선공약과 정당별 비교와 평가

- 연구기간 : 2016년 4월 1일 - 4월 29일 (28일)
- 연구분야 : 산업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의당의 에너지정책과 타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추후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마련.

### ○ 연구내용

-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입법과제 비교,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핵연료세 도입,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원전 홍보, 재처리, 고속로 예산 삭감, 원전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예산 증액,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 체계 구축에 대한 정의당과 타당의 입장 비교 및 정책공약 비교

###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진보진영의 통일,외교,국방전략

- 연구기간 : 2015년 4월 7일 - 2016년 1월 29일(262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진보진영의 통일, 외교, 국방전략 구상
- 연구내용 : 한국의 통일외교국방 정책이 총체적인 난맥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동시에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필요성 확인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 주제 : 16년 총선승리를 위한 정의당 지지층 프로파일

- 연구기간 : 2015년 6월 4일 - 2016년 3월 4일(27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프로파일링 조사를 통한 포지셔닝 전략 수립
- 연구내용 : 프로파일링을 통해 밝혀진 세분화된 그룹에 따른 표적시장의 선정 및 이에 부합하는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 실행 방안 마련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 주제 : 20대 총선 아젠다와 진보정치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7일 - 2016년 3월 9일(130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총선 아젠다 수립

○ 연구내용 : 2016년 20대 총선에서 예상되는 주요 아젠다(Agenda)를 분석함으로써 정의당의 총선 대응 방안 마련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 주제 : 20대 국회가 추진해야할 경제민주화의 개념, 과제, 방안에 대하여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28일 - 2016년 3월 7일(67일)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대 국회 경제 민주화 방향과 내용 수립
- 연구내용 : 19대 국회 경제민주화 논의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경제민주화 정치’의 정책과제는 어떠한 것들인지 정리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 주제 : 1인가구 월세대책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31일 - 2016년 2월 22일(52일)
- 연구분야 : 국토교통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인가구 월세대책 수립
- 연구내용 : 1) 1인 가구 주거 실태를 지역별(전국/서울/경기/인천), 연령별, 점유형태별(자가/전세/월세), 거주면적별(소형/중형/대형), 주택유형별(다가구/다세대/아파트 등)을 기준으로 주거비(임대료, 관리비, 대출 이자)를 파악해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정책 수요 도출
- 2) 1인 가구 대상 공공주택 및 사회주택 현황 분석 및 거주자 인터뷰 통한 정책 필요성 제시
- 3) 1인 가구 주거 정책을 전국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분류해 지역별 정책 제시
- 4) 1인 가구 주거 정책을 주택 탐색, 주택 거주, 주택 퇴거 단계별 세부 구성해 통합형 정책 제시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 주제 : 한국의 실업부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1월 15일 ~ 3월 24일(69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적 실업부조제도 수립
- 연구내용 : 한국의 노동시장과 기존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한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기본원칙, 해외 사례와 국내의 '한국형 실업부조' 논의 분석, 실업부조 제도의 설계: 적용대상, 급여수급조건, 급여형태 및 수준, 실업부조 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쟁점 검토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 주제 :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 연구기간 : 6월 27일 - 11월 7일(130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 연구내용 : 기존의 대학원생 정책 제안의 성과를 수용하는 가운데 그보다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수행. 1) 그간의 성과를 살피고, 2) 메타데이터의 수집보다는 개별(그룹)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 인문사회계/이공계로 나누어 각 계열의 조교들과 접촉해 그들의 목소리를 수용.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 주제 : 1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선거구 미확정 장기화, 새누리당 의회정치 파괴 공작

- 연구기간 : 2016년 1월 5일 - 1월 7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월 1-2주차 정치현황 및 정치대응

○ 선거구 확정 문제는 새누리당의 버티기로 정치피로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졸속협상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거구 확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회농성을 지속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긴밀한 소통과 공동대응을 제안해야 함. 특히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의 비판의 방향은 선거구확정 문제를 넘어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파괴시킨다는 점에서 강한 비판이 필요함. 또한 김무성 대표의 의회정치를 무력화시키는 무능한 리더십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함.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 주제 : 1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여론동향

- 연구기간 : 2016년 1월 7일 - 1월 8일(2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월 1-2주차 각종 여론조사 결과 취합정리 및 분석
- 연구내용 : 언론을 통해 드러난 여론의 추이 취합 정리.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각정당 지지도 등 정리.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 주제 : 2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새누리당의 기득권으로 만신창이가 된 선거구 확정

- 연구기간 : 2016년 2월 17일 - 2월 19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정세 및 이슈 분석
- 연구내용 : 선거구 미확정의 무법천지가 50여일에 이르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자기의 기득권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음. 한마디로 선거구 확정 자체가 만신창이가 되었음. 2월 18일(목)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4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음. 그럼에도 결론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253석으로 확대하는 정치 대개약으로 양당의 입장이 좁혀져 있는 상황.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 주제 : 2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여론동향

□ 연구기간 : 2016년 2월 18일 - 2월 19일(2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월 3-4주차 정치정세 현황 및 대응
- 연구내용 : 언론을 통해 드러난 여론의 추이 취합 정리.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각정당 지지도, 정책선호도, 외국동향 등 정리.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 주제 : 3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국민을 인질로 한 박근혜식 협박정치

- 연구기간 : 2016년 2월 25일 - 3월 3일(8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3월 2~3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박근혜 대통령은 97주년 삼일절의 뜻을 무색하게 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일본과 졸속으로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여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음. 급기야 남북평화의 상징이자,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하더니 최근에는 반민주악법이자, 국정원 무한강화법인 테러방지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삼일절 기념사에서 악법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빌미로 엄정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야당심판론'을 내세우며 20대 총선에 불법 선거개입과 야당탄압에 몰입. 테러방지법을 빌미로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 국민을 토끼몰이 하듯 공포몰이에 몰두하고 있음. 결국 총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주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 주제 : 3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제2의 세월호 -메르스 사태 다시 초래할 것인가

- 연구기간 : 2016년 1월 7일 - 1월 9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의도 비판
- 연구내용 : 외교부는 일선공관 한시직 직원 대량해고, 청와대는 문제제기한 외교부 직원 징계 조치 분석 및 비판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 주제 : 3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 : 여론동향

- 연구기간 : 2016년 3월 2일 - 3월 3일(2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여론동향 정리 및 분석
- 연구내용 : 언론을 통해 드러난 여론의 추이 취합 정리.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각 정당 지지도, 정책선호도, 외국동향 등 정리.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 주제 : 총선 수도권 후보 출마자 지원 보고서

- 연구기간 : 2016년 4월 1일 - 4월 12일(1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총선 수도권 후보 출마자 지원 보고서
- 연구내용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마한 당 소속 후보들의 현황과 현지 상황을 검토한 보고서
- 연구성과 : 총선 대응 및 평가 자료로 활용

## 주제 : 정의당 개헌 대응 방향

- 연구기간 : 2016 4월 19일 ~ 4월 22일(5일)
- 연구분야 : 정의당 개헌 대응 방향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자들의 정의당에 대한 제언을 통해 당 발전 방향 모색
- 연구내용 : 총선 직후, 논의될 정치권의 개헌 논란에 대해 정리하고 당의 대응 방향을 모색.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 주제 : 19대 총선 평가 보고서

- 연구기간 : 2016 4월 19일 - 5월 17일(35일)
- 연구분야 : 19대 총선 평가 보고서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자들의 정의당에 대한 제언을 통해 당 발전 방향 모색
- 연구내용 : 20대 총선 결과 분석, 당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정리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당원 교육 자료로 활용

## 주제 : 20대 대선 대응 관련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4일 - 10월 8일(14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 대선 대응 관련
- 연구내용 : 현재 정치권의 대선 지형 분석, 주되게 부각되는 대선 후보 담론 정리, 당의 대선 대응 방향과 과제 정리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 주제 : 박근혜 대통령 하야정국 대응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27일 - 11월 2일(7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대통령 하야정국 대응방향과 과제
- 연구내용 : 하야정국 심화의 정치상황에서 한국정치에서 유사 사례이자, 역사정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4.19혁명의 정치적 수습과정의 함의 도출 및 대응방향 정리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 주제 : 탄핵소추, 하야 외국사례 보고서

연구기간 : 2016년 11월 8일 - 11월 일(5일)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 탄핵소추 및 하야(사임) 외국사례 검토

○ 연구내용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하야(사임)의 해외사례를 통해 당의 전략을 검토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 주제 : 정의당 개헌 대응방향과 과제

- 연구기간 : 2016년 11월 15일 - 11월 19일(14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의당 개헌 대응방향과 과제 설정
- 연구내용 : 대통령 하야국면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입장을 확인, 당의 개헌 대응방향과 과제 설정하기 위한 보고서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 주제 : 2015회계년도 결산안 분석

- 연구기간 : 2016 년 6월 23일 - 8월 16일(2개월 23일)
- 연구분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2015회계년도 결산안 분석을 통해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 제시

○ 연구내용:

- 부처별 예비비 집행의 적절성 검토
- 집행률 저조 사업의 원인 파악 및 대안 제시
-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분석
- 결산상 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 연구성과:

- 예결위원의 결산 심사 자료로 활용

# 주제 : 국회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에 관한 연구

---

---

□ 연구기간 : 2016년 6월 25일 ~ 7월 15일(20일)

□ 연구분야 : 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국회 특수활동비 현황 조사를 통해 규모와 지출의 내역에 대한 파악을 통해 예산 심의 과정에 의견 제출

### ○ 연구내용

- 국회 특수활동비의 규모 파악
- 국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경비의 3년간 추이
-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 구조에 대한 파악
- 국회 특수활동비 축소와 대안의 제시

### ○ 연구성과

- 예산안 심사시 특수활동비 규모 축소 주장의 근거로 활용

## 주제 : 중소기업 지원 제도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07월 18일 ~ 09월 18일(2개월)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용 가능한 정책의 발굴과 제도 운영의 문제점 도출
- 연구내용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현황 파악
  - 각종 지원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법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 방안
- 연구성과
  - 당원 대상 교육의 교안으로 활용

## 주제 : 2016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안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07월 26일 ~ 08월 2일(1개월)
- 연구분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예산안 여부의 파악과 정의당 대응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추경예산안 편성의 적절성
  -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의 제시
  - 추경예산안에 부적절한 사업의 도출
- 연구성과
  - 당 소속 의원의 예산 심사 자료로 활용

## 주제 : 2017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08월 20일 ~ 10월 26일(2개월 6일)
- 연구분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7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등을 통한 심사전략 마련
- 연구내용
  - 정부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검증
  - 사회적 약자 배려 예산 확보 방안
  - 연례적인 문제성 사업 파악 및 의견 제시 등
- 연구성과
  - 당 소속의원들 예산안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국회 수정예산안을 통해 본 국회의원의 대표성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11월 01일 ~ 11월 26일(25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이다. 이러한 비판이 근거가 되는 예산 수정안을 통해 확인하여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제안하기 위함

### ○ 연구내용

- 국회의원들의 국가대표성, 정당대표성, 계층 대표성, 지역 대표성, 단체대표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013~2016까지 국회 수정 예산안 분석 자료에 대한 검증
-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국회 예산 심의의 질적 전환 방향 제시
- 우리나라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 및 개선방향

### ○ 연구성과

- 지역 대표성이 아니라 단체대표성이 과다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하는데 활용.

## 주제 : 2017년 국고보조사업 변동 추이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03일 ~ 10월 23일(20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전가되는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변동 추이를 분석을 통해 이전되는 비용의 규모 파악을 통한 문제제기

#### ○ 연구내용

- 2015, 2016년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변동 추이 분석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파악 및 분석
-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 연구성과

- 국회 지방재정 분권특위 위원 업무 지원



# 주제 :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03일 ~ 12월 05일(2개월 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 예산 무분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투자심사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마련

### ○ 연구내용

- 투자심사제도의 현황(개요, 목적 등)
- 2013~2016년까지 중앙투자심사 신청 및 결과 분석
-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의 연관성 분석
- 투자심사 제도의 개선방안 제안

### ○ 연구성과

-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보완을 통한 지방재정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자료

## 주제 : 학교 우레탄트랙 개선 검토

- 연구기간 : 2016년 7월 7일 - 7월 14일(8일)
- 연구분야 : 교문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유해한 학교 우레탄트랙의 빠른 교체 등 개선방안 검토
- 연구내용
  - 정부의 학교 우레탄트랙 전수조사 결과
  - 유해한 학교 우레탄트랙의 빠른 교체를 위한 제반 여건
  - 유해한 학교 우레탄트랙의 교체에 있어서 저해 요인
  - 예비비 긴급 투입, 여름방학 중 공사 등 제언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학교 전기요금 체계 검토

- 연구기간 : 2016년 08월 12일 - 08월 25일(14일)
- 연구분야 : 교문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및 학교 전기요금 체계 검토
- 연구내용
  - 폭염 대비 개학연기 및 수업일수 단축 가능성 검토
  - 전기 누진제 개편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향 검토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누리과정 해결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16년 9월 1일 - 9월 3일(3일)
- 연구분야 : 교문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누리과정 해결방안 검토
- 연구내용
  - 정부여당의 특별회계 법안 검토
  - 특별회계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관계 검토
  - 정의당의 누리과정 문제 해결 특별회계 법안 입안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검토

---

---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27일 - 11월 2일(7일)
- 연구분야 : 교문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검토
- 연구내용
  - 2012년부터 17년까지 최근 6년간 학교통폐합 인센티브의 추이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점 및 행정행위 검토
  - 학교 많이 없애고 포상받은 시도교육청 검토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

---

---

- 연구기간 : 2016년 11월 10일 - 11월 28일(19일)
- 연구분야 : 교문위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정 역사교과서 검토
- 연구내용
  - 국정 역사교과서의 위법 소지 검토
  - 국정 역사교과서의 주요 내용 '정부 수립' 검토
  - 국정 역사교과서와 현장검토 교원
  - 국정 역사교과서의 학교현장 적용 검토
  -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 검토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 주제 : 20대 국회 개원과 국회개혁 과제

- 연구기간 : 2016년 04월 25일 ~ 06월 24일(2개월 00일)
- 연구분야 : 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특권 없는 국회 등 국회개혁 과제를 마련함.
- 연구내용
  - 국회의원 특권 현황과 개혁 과제
  - 국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
  - 깨끗한 국회를 위한 개혁 과제
  - 문턱 없는 국회를 위한 개혁 과제
- 연구성과
  - 당의 국회개혁 과제로 채택하여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안 마련

## 주제 : 정의당의 개헌 대응 방향

- 연구기간 : 2016 년 4월 25일 - 2016 년 8월 18일(3개월 25일)
- 연구분야 : 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헌법 개정의 진보적 의제 모색 및 개헌 방향에 대한 정의당의 대안 마련
- 연구내용:
  - 개헌 논의 진행 현황
  - 정부형태 별 특성 및 장단점
  - 기본권 등 포괄적 개헌의제
  - 정의당의 개헌 대응 방향
- 연구성과:
  - 당론 형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문제점과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6년 05월 02일 ~ 06월 09일(1개월 08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2016년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 제도개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 행정자치부 2016년 지방재정 개편방안의 주요내용
  - 조정교부금 제도 연혁
  -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의 정부안 반대 이유
  -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향
- 연구성과
  - 지방재정 개편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마련하고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안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주제 : 20대 국회 정치개혁 과제

- 연구기간 : 2016년 06월 15일 ~ 08월 21일(2개월 0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출범에 따라 정의당의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을 마련함.

#### ○ 연구내용

- 정의당의 20대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과제
- 국회 정치발전특위 주요 의제 정리
- 중앙선거위 2016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분석

#### ○ 연구성과

- 정치발전특위 소속 위원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및 정치관계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주제 : 지방교부세 현황과 개혁방향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7일 ~ 11월 7일(1개월 0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정한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산정하고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연구내용
  - 지방교부세 제도 현황과 문제점
  - 보통교부세 교부율의 확대 방안
  - 특별교부세 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
- 연구성과
  -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고용창출을 위한 법인세 개혁방안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12일 - 2016년 12월 7일(1개월 25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법인세 개혁이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 연구내용

- 법인세 인상 및 인하의 효과에 대한 기존 논의 분석
- 법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경제학적 이론 분석
- 법인세 개혁을 위해 기업의 본질과 기업지배 구조 분석

####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 주제 : EU 법인세 개혁을 위한 지침 평가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17일 - 2017년 10월 21일(5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인세 관련 논쟁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 방안 논의를 이해하고자 함

#### ○ 연구내용

- EU의 법인세 개혁안 내용

- 공통연결법인세기준(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Base: CCCTB)이란 무엇인가

- 조세회피방지지침을 제3국까지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 주제 : 노사협의회 활용 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17일 - 2016년 10월 31일(14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노사협회의 필요성과 실질적 운영에 대한 요구 분석
-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 ○ 연구내용

- 근로자 참여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노사협회의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에 대한 재검토
-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라는 이중적 노사관계의 모순과 보완 가능성에 대한 분석

####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 주제 : 법인세 과세 근거에 대한 논쟁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24일 - 2017년 11월 4일(12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법인세 인상을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법인과 법인세의 성격에 대한 경제적 의의를 이해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법인이란 무엇인가? 법학·경제학적 관점에서
  - 법인으로서의 기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 다양한 기업이론과 법인세에 대한 관점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 주제 : Stewardship Code의 도입배경과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31일 - 2016년 11월 11일(14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우리나라 재벌기업 지배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한 주주가치하락과 개인투자 손실 확대에 따른 자본시장 신뢰도 개선을 위해
- 연구내용
  - Stewardship Code 주요 내용과 그 취지
  - Stewardship Code 원칙과 세부지침
  - Stewardship Code 도입 시 일부 세부규정의 완화/강화 필요성에 대해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 주제 : 법인세 인상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검토

- 연구기간 : 2016년 11월 7일 - 2017년 11월 21일(5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복지 확대를 위한 세수 증가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때 인상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 연구내용:
  - 법인세 인상을 찬성하는 이유
  -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 법인세 인상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방법의 필요성
  - 행위자 기반 모형의 활용 가능성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 주제 : 토마 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와 법인세 개혁 방안 비교

- 연구기간 : 2016년 11월 21일 - 2017년 11월 25일(5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빈부격차 및 양극화의 전세계적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토마 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를 이해하고 법인세 인상 논의와 관련하여 비교 검토

### ○ 연구내용

- 글로벌 자본세(Global Capital Tax)란 무엇인가?
- 글로벌 자본세의 효과
- 글로벌 자본세의 실현 가능성과 법인세 인상 가능성 비교

###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 주제 : 행위자 기반 모형의 정책 활용 가능성

- 연구기간 : 2016년 11월 28일 - 2016년 12월 12일(14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경제학의 기존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과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방법 중 행위자 기반 모형의 장점과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 ○ 연구내용:

- 행위자 기반 모형(Agent-Based Model, ABM)이란 무엇인가?
- 행위자 기반 모형의 장점: 정책 실험실 혹은 실험도구
-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의 도래와 경제학 방법의 획기적 변화 가능성
- 향후 활용가능성의 증대 경향

###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 주제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둘러싼 논쟁과 도입을 위한 과제

- 연구기간 : 2017년 1월 9일 - 2017년 1월 23일(14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규직/비정규직의 소득 격차 해소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을 위해 논쟁의 쟁점과 실현 가능성 분석

### ○ 연구내용: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달성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분석

- 노동계와 재계의 주장 분석

###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 주제 : 초과이윤공유제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7년 1월 16일 - 2017년 2월 6일(21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초과이윤공유제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경제적 제도로서의 주식회사 시스템 분석
  - 초과이윤공유제란 무엇인가?
  - 초과이윤공유제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 실현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 주제 : 실효세율 논란에 대한 검토

- 연구기간 : 2017년 1월 5일 - 2017년 1월 12일(7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법인세 개정의 근거로 제시되는 실효세율을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고 각 계층이 합의할 수 있는 실효세율을 정의하기 위한 연구

#### ○ 연구내용:

-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무엇인가?
- 실효세율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통일적인 실효세율 재정의를 위해

####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 주제 :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년 1월 13일 - 2017년 1월 22일(10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재벌 세습을 강화하고 기업집단의 불안정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기존 논의 분석

#### ○ 연구내용:

- 지주회사란 무엇이고 왜 도입하고자 하는가?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방식의 문제점
- 지주회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배구조인가?

####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 주제 : AI와 자동화가 경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백악관 보고서 분석

- 연구기간 : 2017년 1월 23일 - 2017년 1월 27일(5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과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AI와 자동화로 인한 미래 산업의 모습을 예상하고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미국 백악관 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정책마련에 참고하기 위해

### ○ 연구내용

- AI가 대체하게 될 노동분야와 그 규모
- 산업 재편 과정에서의 실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 AI 시대에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정부 지원 과제는 무엇인가?

###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 주제 : 종업원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7년 1월 30일 - 2017년 2월 3일(5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통상,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종업원 이사·감사 선임을 위한 법개정 논의 중 상법 개정 방식과 노동법 개정 방식의 차이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모색

#### ○ 연구내용

- 김종인 의원 안(상법 개정을 통한 종업원 이사·감사 선임)이 갖는 의미
- 채이배 의원 안(노동법 개정을 통하거나 기타 소액주주보호제도를 활용)이 갖는 의미
- 새로운 방안에 대한 모색

#### ○ 연구성과

- 당의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

## 주제 : 누리과정 재정책확보방안

- 연구기간 : 2016년 2월 10일 - 2월 11일(2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재정책확보방안 모색
  - 2016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해소방안 모색
- 연구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분 교부율 1% 상향과 특별교부율 1% 하향을 통해 보통교부금 2조 1,700억원 마련으로 누리과정 재정책확보
  - 2016년 예산(추경재원) 확보방안으로 ① 특별교부율 하향, ② 순세계잉여금 활용, ③ 일반예비비 활용, ④ 불요불급한 지출조정 등 제시
- 연구성과
  - 당론으로 채택하여 대표단 발언, 브리핑 등 활용. 법안 발의

## 주제 : 정의당 경제·민생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16년 3월 1일 - 5월 10일(2개월 10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대 국회를 맞이하여,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운영에 대응하는 정의당의 분야별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내용:
  - 다양한 소득 불평등과 임금·고용 없는 성장, 낮은 복지지출의 문제를 확인 정의당의 민생경제 정책과제와 경제민주화 정책과제를 요약
  - 임금주도 성장, 고용주도 성장을 위한 노동정책, 일자리정책, 중소기업·자영업자, 청년정책, 농업정책, 산업정책 분야의 정책과제
  -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경제민주화 정책과제로 노사관계개혁, 재벌개혁, 조세개혁, 금융개혁을 제시
- 연구성과
  - 20대 국회 입법과제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20대 국회 정책공약 비교검토

- 연구기간 : 2016년 4월 15일 - 5월 3일(19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등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대 국회 개원 관련 원내정당의 총선공약 비교
- 연구내용:
  - 정의당의 공약을 기준으로 주요분야별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공약을 요약하고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 연구성과
  - 20대 국회 개원 이후 중점법안 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책

- 연구기간 : 2016년 4월 29일 - 6월 1일(1개월 3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등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의 입장 및 대책 마련
- 연구내용:
  - 조선업 등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방안의 문제점 분석
  - 고용안정 우선, 산업 구조개혁 등 정의당의 구조조정 5대 원칙
  - 노동자 고용보장 및 지역경제 안정화 등 5대 세부대책 제시
- 연구성과
  - 당론으로 채택하여 거제, 울산 등 현장 방문 및 기자회견 진행

## 주제 : 전자산업 하청노동자 실명사건

- 연구기간 : 2016년 5월 13일 - 5월 16일(6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삼성전자·LG전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실명사건 검토
- 연구내용:
  - 사업주의 메탄올 사용시 주의의무 위반, 보호장구 지급 위반
  - 덜 유해한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을 위해 메탄올 사용
  - 제조업 불법과건으로 인한 인력관리, 산업안전관리 허술
  - 다단계 하도급 구조속에서 원청 대기업의 책임회피
- 연구성과
  - 당 대응방안을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에 참고자료로 제공

## 주제 : 정의로운 구조조정 입법과제

- 연구기간 : 2016년 6월 2일 - 6월 10일(9일)
- 연구분야 :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부실기업 구조조정대책의 후속작업으로 입법과제 검토

#### ○ 연구내용:

-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리해고제한법] (근로기준법)
- 사람이 우선인, 사람을 살리는 [구조조정개혁법] (고용보험법 등)
- 상습적인 하청노동자의 [임금채불방지법] (근로기준법·하도급법 등)
- 비정규직, 지역경제를 살리는 [특별고용지원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 부실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경영진우선책임법] (상법 등)
- 기업 부실의 방지·조장을 막는 [대우조선해양방지법] (상법 등)
- 부실경영을 막는 노동자경영참가 [노동이사제법] (상법 등)
-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법] 제정
- 부실한 고용안정망을 확충하는 [전국민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 불법·편법적인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물량타임페지법] (과건법 등)

#### ○ 연구성과

- 상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안 발의

## 주제 : 정부 추경예산안(구조조정) 검토

- 연구기간 : 2016년 7월 20일 - 7월 22일(3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구조조정 관련 분야 검토
- 연구내용:
  - ‘깜깜이·면죄부·무책임’추경 반대, 진상규명·책임추궁·대책마련 우선
  - 국책은행에 직접출자한다면 한은을 동원한 ‘꼼수’인 자본확충펀드 조성은 철회할 필요
  - 작년 해운보증기구 지원 예산 2백억 불용,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선박금융지원정책 마련
  - 조선산업정책은 9점 만점에 한국은 2점, 중국은 9점, 고용안정을 위해선 산업정책이 시급
- 연구성과
  - 당 입장 발표 및 추경예산안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 검토

- 연구기간 : 2016년 7월 28일 - 7월 29일(2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 검토를 통해 당론 마련
- 연구내용:
  - 박근혜 정부의 네 번째 개정안, 세수효과는 +3,171억원에 불과
  - 복지증세는 고사하고 정부의 '공약가계부'와 '조세정책방향'에도 미달
  - 임대소득 과세유예, 대기업 법인세 감면확대 등 부자감세 기조 유지
  - 고용·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은 미흡하고 공평과세는 실종
- 연구성과
  - 상임대표 인터뷰 참고자료 및 세법개정안 심의 시 기초자료 활용

## 주제 : 부정청탁금지법 검토

- 연구기간 : 2016년 7월 28일 - 8월 9일(13일)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부정청탁금지법 중 국회의원 예외조항에 대한 검토
- 연구내용:
  - 국회의원 예외조항(‘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의 해석
  - 국회의원 관련 예외 규정(제3자 고충민원 전달)의 네가지 문제점  
‘공익적 목적’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해석·적용상의 모호성이 있고,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경우 ‘제3자 고충민원 전달’ 조항 자체가 사실상 불필요한 문제점 등
- 연구성과
  - 국회의원 예외조항 논란 관련 당론 정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소득불평등 해소방안

- 연구기간 : 2016년 9월 1일 - 12월 10일(3개월 10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체불임금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연구내용:
  - 소득불평등의 실태와 정책방향, 과제
  - 최저임금의 현황, 주요쟁점 검토 및 입법 과제
  - 최고임금의 역사와 실태, 임원보수규제 입법례, 최고임금법의 제정 방향, 공공기관 및 국회의원 최고임금 도입방안
  -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법 개정 방안
- 연구성과
  - 당의 소득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 및 입법의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체불임금 대책 검토

- 연구기간 : 2016년 9월 5일 - 8월 10일(6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체불임금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연구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 근로감독관 증원 등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행정대책 강화
- 체불임금 대위권 도입 등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 건설업, 조선업, 공공기관 등 산업·업종별 임금체불 대책

○ 연구성과

- 당 주최 토론회 및 추후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정의당 세법 개정안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1일 - 10월 21일(21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총선공약에 기초하여 당의 2017년 세법개정안 검토

○ 연구내용:

-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 등 MB 감세 전으로 원상회복
- 대기업의 비생산적 사내유보금 운용수익에 대한 10% 할증과세
- 과표 100억원 이상 고소득 법인의 실효세율 인상
- 대·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과 정규직 전환 지원
- 기형적인 소득세 정상화, 고소득층 누진세율 강화
-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확대
-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 확대 및 누진세율 적용
- 금수저 손자·손녀를 방지하는 증여세 과세 강화
- 정당한 부의 이전을 유도하는 고액상속 과세 강화
-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이사비 공제 신설
-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

○ 연구성과

- 당 세법개정안 발표 및 입법 발의

## 주제 : 법인세 인상 추가검토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24일 - 10월 26일(3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의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추가 검토
- 연구내용:
  - 19대 국회 및 타 정당의 법인세 인상안
  - MB 감세 이전으로 법인세 원상회복안의 효과
  -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현황
  - 법인세의 단계적 인상방안 검토
- 연구성과
  - 법인세 세율인상 관련 당론 채택 및 개정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제 :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 연구기간 : 2016년 12월 18일 - 12월 19일(2일)
- 연구분야 : 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한 검토
- 연구내용:
  -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한 해석
  -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비서실 등의 보좌의 적절성
- 연구성과
  - 당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정의당 정의로운 복지론 및 대표공약

- 연구기간 : 2016년 01월 10일 - 02월 23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의당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복지정책의 방향을 확립하고, 주요 대표공약 마련 필요
- 연구내용
  - I. 「정의로운 복지」 기조와 배경
  - II. 「정의로운 복지」 대표공약 해설
    - 국민 가계비에 월 100만원씩 보태지는 사회복지
    - 건보료 소득기준 부과, 지역 552만 세대 보험료 인하
    - 복지 구조개혁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질 좋은 보육을
    - 사회복지세 등 복지증세로 연 50조원 복지재정 확충
  - III. 「정의로운 복지」 11대 정책과제
    - 평생복지분야
    - 기초복지분야
    - 복지증세분야
- 연구성과
  - 당 공약으로 발표



# 주제 : 정의당 선진국형 혁신보육 공약

□ 연구기간 : 2016년 01월 10일 - 03월 08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정의당이 보육종합정책 마련과 외화 필요

### ○ 연구내용

#### 1.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 마련

- 보육균형발전지표 도입으로 국공립대기자수 26만명 해소
- 보육거점센터 운영으로 민간어린이집 역량 지원
-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우선 향상
-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우수보육 실현
- 우수교사 양성 및 지원 시스템 강화
- 보육119 도입, 보육전담공무원, 개방형어린이집 실시로 안심어린이집 실현
- 누리과정 국고 지원으로 부모불안 해소
- 보육료 지원 현실화, 바우처방식에서 시설운영비 직접지원으로 전환

#### 2. [자녀양육 사회책임제] 마련

- 임신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핀란드형 마더박스 도입
- 3대 육아휴직제: 출산전후휴가제 확대, 파파쿼터제 도입,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 자녀 담당의사 제도 도입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 ○ 연구성과

- 당 공약으로 발표

# 주제 : 정의당 보건의료대개혁 방안

- 연구기간 : 2016년 01월 10일 - 03월 10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메르스 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대개혁 방안 마련 필요
- 연구내용
  1.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공공성
    -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일차의료 강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
    -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 OECD 평균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불평등 해소
    -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확대, 어린이입원비 100% 보장
    - 계층간, 지역간 사망률 격차 등 건강불평등 해소
  3. 공정한 보험료 체계
    -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
    - 실손의료보험 규제로 민간의료보험 부담 해소
- 연구성과
  - 당 공약으로 발표

# 주제 : 정의당 장애인 권리보장 5대 비전 및 20대 정책

- 연구기간 : 2016년 01월 10일 - 03월 15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ECD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 복지를 OECD 평균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장애인 정책로드맵 마련 필요</li> </ul> </li> <li>○ 연구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등급제 폐지,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3) 장애인 탈시설·지역사회 거주 중합대책 마련, 4) 장애인 복지예산을 OECD 평균 국가로</li> </ol> </li> <li>2.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 기본권 보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li> <li>2) 공공주택 확대, 주택개조사업 확대 등 장애인 주거대책 마련</li> <li>3) 저상버스 100%,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li> <li>4) 특수교사 확대 및 평생교육 강화</li> <li>5) 장애인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li> <li>6)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즉각 중단 및 지자체 복지사업 장려</li> </ol> </li> <li>3.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건강생활 보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생활 지원, 2) 건강보험 보장성, 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등 건강권 보장, 3) 장애인가족 지원 대책 강화</li> </ol> </li> <li>4. 장애인 소득 보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양의무제를 폐지, 2)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li> <li>4) 장애친화기업 설립 등 새로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li> </ol> </li> <li>5. 장애여성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권 보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인지적 장애인자립생활 기반 마련, 생애주기별 정책 수립</li> <li>2)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li> <li>3)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인권교육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li> </ol> </li> </ol> </li> <li>○ 연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공약으로 발표</li> </ul> </li> </ul>

# 주제 : 정의당 복지일반 공약

□ 연구기간 : 2016년 01월 10일 - 03월 21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전국민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

### ○ 연구내용

1. 촘촘한 복지인력, 그물망 복지행정으로 복지강국 실현

- 1) 복지-고용-주거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실시
- 2) 복지담당 공무원 확대로 찾아가는 국민복지 실현
- 3)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로 생애주기별 복지강국 진입
- 4) 복지국가 대전환 위원회 설치, OECD 평균복지국가 실현 로드맵 마련

2. 전국민 복지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제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 2)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 3) 산재보험 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구축
- 4) 「두루누리 사회보험 2」 신설로 소상공인·지역가입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3. 복지자치와 복지재정 확대

- 1)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중단 및 지자체 복지사업 장려
- 2) 영유아보육·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전국민적 사업의 국가책임제
- 3) 사회복지세 도입 등 50조원의 복지 증세로 책임복지 실현

### ○ 연구성과

- 당 공약으로 발표

## 주제 : 정의당 노인 공약

- 연구기간 : 2016년 01월 10일 - 03월 29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인 빈곤율 OECD 최하위, 자살률 최하위의 상황에서 노인 종합 정책 마련 필요
- 연구내용
  1. OECD 평균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
    - 1) 국민연금 급여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 2)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차등없이 20만원 지급
    - 3)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노인가구 기초생활 지원
    - 4) 노인 참여형 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
  2. 주거·요양·의료 3대 가계비 해소
    - 1) 공공실버주택 도입, 주거비 지원 확대, 장기요양 주거개선급여 신설
    - 2) 좋은 돌봄, 질높은 요양서비스체계 구축
    - 3) 노인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및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3. 지역사회와 함께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권리 보장
    - 1) 살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체계 구축
    - 2) 학계, 의료, 민간이 함께하는 사회참여지원 네트워크 구축
  4. 노인 인권과 존엄한 죽음 보장
    - 1) 연령 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 2)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마련
    - 3) 「착한 장례식장」 운영과 「표준장례비용」 도입으로 반값 장례비 실현
- 연구성과
  - 당 공약으로 발표

## 주제 : 정의당 아동청소년 공약

- 연구기간 : 2016년 01월 10일 - 03월 29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의 아동, 청소년 종합 정책 마련 필요
- 연구내용
  1. 폭력없는 세상, 존중받는 인권
    - 1)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종합대책 마련
    - 2)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법제화
    - 3)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실현
    - 4)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조정
  2. 건강한 생활, 안전한 학교
    - 1) 어린이 건강담당의사 제도 도입
    - 2)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제
    - 3) 방사능 없는 학교 급식 실현
    - 4) 쾌적한 친환경 건물에서 공부하는 선진학교
    - 5) 재난위험시설 완전 해소, 유해물질 없는 운동장
  3.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개편, 체험활동 강화
    - 1)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문화예술교육 개편
    - 2) 아동청소년 국공립 박물관 · 과학관 무료입장
    - 3) 공공 청소년기관 · 시설 및 인력 확충
  4.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알바 권리 보호
    - 1)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실시
    -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 3) 고졸 취업장려금으로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 연구성과
  - 당 공약으로 발표

## 주제 : 정의당 생애주기별·분야별 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16년 03월 - 05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의당 생애주기별 및 분야별 핵심 정책 마련
- 연구내용
  - I. 문제제기
  - II.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 1. 영유아(보육) 분야
    - 2. 아동·청소년 분야
    - 3. 노인 분야
  - III. 분야별 정책과제
    - 1. 복지일반 분야
    - 2. 장애인 분야
    - 3. 보건의료 분야
- 연구성과
  - 당 정책으로 채택, 공약으로 반영

# 주제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 연구기간 : 2016년 09월 - 12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한국의 복지전달체계는 과도한 민간 의존과 약한 공공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과도한 민간의존과 약한 공공성 체계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재원부담, 서비스 접근의 제한, 낮은 보장성과 넓은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는 질낮은 일자리, 낮은 자존감 문제로 작용해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데도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는 사회서비스 영역이 구축될 때부터 시작된 문제로 사회서비스 영역이 점차 커져가는 현 시점까지 해결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보육, 요양, 활동보조서비스, 방과후, 재활 등 사회서비스 전반의 체계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아이디어 수준으로만 거론되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 연구내용

- 보육, 요양, 활동보조서비스, 방과후, 재활치료 등 사회서비스 현황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과 특징
-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재원, 공급체계, 계획수립, 관리운영방안 등
- 지역사회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방안

### ○ 연구성과

- 당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미래건강정치의 담론과 과제

□ 연구기간 : 2016년 09월~12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책 의제 중심에서 건강권을 매개로 한 건강정치운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미래 건강정치의 담론 및 쟁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

○ 연구내용

- 무상의료운동 및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에 대한 평가
- 건강정치를 둘러싼 세력의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한 분석과 이에 기반한 담론 지형 및 쟁점에 대해 검토
- 미래 건강정치가 담보해야 할 가치체계와 비전, 그리고 전략적 방향 및 과제에 대해 검토함

○ 연구성과

- 당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고령 친화 정책 개발

□ 연구기간 : 2016년 09월~12월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고령화 사회를 넘어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에 적합한 고령 친화 정책 개발 시급
- 고령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선진국 모두가 겪게 되는 인구사회학적 변화로 이제 한국사회는 고령화를 하나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함.
- 반면, 정의당은 노인정책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정책의 개발을 일상화시켜야 함.

#### ○ 연구내용

- 유엔에서 권고한 고령친화도시 모델의 한국적 적용사례 분석 및 한계
- 노인 내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비공식돌봄 및 가족돌봄 보상 및 지원체계 방안 검토
- 노인 교통 지원 체계 마련 검토

#### ○ 연구성과

- 당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최근 해외 진보정당의 정책 동향과 그 시사점

- 연구기간 : 2016년 09월~12월
- 연구분야 : 운영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진보정당들은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의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진영, 영국 노동당 대표 경선의 제러미 코빈 대표 진영, 스페인의 포데모스, 그리스의 시리자 등이 이러한 흐름에 속함.
- 이러한 해외 진보정당 정책 동향의 소개 및 검토는 현재 한국 사회 상황에 부합하는 정당 정책 개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임.

### ○ 연구내용

- 최근 해외 진보정당의 정책 공약 검토(전문 번역 포함):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의 샌더스 후보 공약, 2015-2016년 영국 노동당 대표 경선의 코빈 대표 공약, 2016년 스페인 총선의 포데모스 공약, 2015년 그리스 총선의 시리자 공약 등.
- 한국 제 정당의 총선 공약과 비교, 분석

### ○ 연구성과

- 당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좌파기득권 주장의 문제점과 사회연대적 해법 연구 —이데올로기 비판, 사회연대적 해법

□ 연구기간 : 2016년 09월~12월

□ 연구분야 : 운영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좌파기득권’ 주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좌파기득권’ 주장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연대적 해법의 모색

### ○ 연구내용

- ‘좌파기득권’ 주장의 내용적 분석 및 비판
- 내용적 분석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 비판
- 선거프레임으로서의 잠재력 및 장단점 분석
- 대응전략으로서의 사회연대적 해법 제안

### ○ 연구성과

- 당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중소기업 20대 국회 입법과제 개발 및 전략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6년 09월~12월
- 연구분야 : 정무위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과도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로 인한 치열한 경쟁과 삶의 질 하락
-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
-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정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연구내용

-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
- 19대, 20대 국회 중소기업 보호 법률의 제개정 현황 파악
- 현행 지원 법률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 ○ 연구성과

- 당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고용창출을 위한 법인세 개혁방안

- 연구기간 : 2016년 11월~12월
- 연구분야 : 기재위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로운 방식의 고용 창출 방안 마련 필요
- 연구내용
  - 법인세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 검토
  - 자본주의 기업의 본질과 법인세의 의미에 대한 논의 제시
  - 새로운 경제학과 방법론 소개
  -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 개정 방안 모색
- 연구성과
  - 당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청년 정책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 당 청년부문 조사연구

□ 연구기간 : 2016년 09월~12월

□ 연구분야 : 여가위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고용 노동, 교육, 복지, 금융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역에서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음
- 각 정당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회적이고 정세에 따른 인스터트가 되기 쉬운 한계를 가짐
- 중장기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 연구내용

- 정당 청년부문 활동가, 대학내 정책 그룹, 청년 시민사회단체 조사
- 외국 사례 및 상황 조사 및 국내 타 정당 사례 조사
- 청년 정치인 사례 조사
- 정당 청년정책 소구력 조사
- 정책 제언

### ○ 연구성과

- 당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지역 청년정책 개발 - 지자체 청년 조례 연구 및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6년 09월~12월

□ 연구분야 : 여가위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 연구목적

- 청년 실업, 청년 복지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가 광역단위 지자체를 중심으로 신설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효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된 바 없음
- 다가올 지선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 연구내용

- 전국 청년 관련 조례 파악 및 분석
- 청년 관련 조례 제정 참가 단체 인터뷰
- 수혜자 인터뷰
- 해외 대표 사례 조사
- 정책 제언

### ○ 연구성과

- 당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청소년 정책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2016년 09월~12월
- 연구분야 : 정무위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청소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정책 개발 필요

- 연구내용

- 당내 청소년정책연구모임(가)과 청소년 단체 활동가 FGI
- 청소년 정책 관련 외국 사례 및 상황 조사, 국내 및 타 정당 사례 조사
- 정책 제언

- 연구성과

- 당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노동 환경의 변화와 정책 대안

- 연구기간 : 2016년 09월~12월
- 연구분야 : 환노위
- 연구방법 : 외부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당 노동정책 점검
  - 한국 노동체제에 대한 진단과 전략 검토
  - 노동의제에 대한 당의 이해도 제고
- 연구내용
  - 4차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 성별임금격차와 정책대안
  - 고령화와 노동정책
  - 세대간 불평등 해결방안
  - 임금체계 현황과 정책 시사
  - 노동체제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전략
- 연구성과
  - 당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 : 기본소득제 관련 정책수요 조사

- 연구기간 : 2016년 10월 26일 - 2016년 10월 29일( 개월 일)
- 연구분야 : 기본소득제 이해정도, 정책개발 방향 등
- 연구방법 : 정의당 당원 대상, 이메일 조사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해정도, 인식수준을 파악하여 정책개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함.
- 연구내용: 노동시장의 구조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삶의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됨. 각종 복지제도가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유럽에서도 기본소득제도를 실험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개발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
- 연구성과: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인식 파악

## 주제 : 2016년 1~3사분기 정당지지율 변화추이 보고

---

- 연구기간 : 2016 년 10 월 17 일
- 연구분야 : 여론동향
- 연구방법 : 언론발표 여론조사 분석 (리얼미터, 갤럽)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정당의 지지율 향상 및 사업 방향 설정
- 연구내용: 2016년 1월~9월까지의 각종 여론조사(리얼미터와 갤럽의 정기조사) 중 정당지지율 변화 추이 분석
- 연구성과: 국민 여론 흐름 파악 및 대응

# 주제 : 2016년 1~3사분기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분석

- 연구기간 : 2016 년 10 월 24 일
- 연구분야 : 여론동향
- 연구방법 : 언론발표 여론조사 분석 (리얼미터, 갤럽)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를 통한 메시지 대응 방향 설정
- 연구내용: 2016년 1월~9월까지의 각종 여론조사(리얼미터와 갤럽의 정기조사) 중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추이 분석
- 연구성과: 국민 여론 흐름 파악 및 대응

## 주제 : 2016년 10월 여론동향 분석

- 연구기간 : 2016년 10 월 31 일
- 연구분야 : 여론동향
- 연구방법 : 언론발표 여론조사 분석 (리얼미터, 갤럽)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국민 니즈 파악 및 메시지/사업 기획 방향 설정
- 연구내용: 2016년 10월 각종 여론조사(리얼미터와 갤럽의 정기조사) 중 정당지지율/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대통령 후보 지지율 변화 추이 분석
- 연구성과: 국민 여론 흐름 파악 및 대응

## 주제 : 2016년 11월1주 여론동향 분석

- 연구기간 : 2016 년 11 월 7 일
- 연구분야 : 여론동향
- 연구방법 : 언론발표 여론조사 분석 (리얼미터, 갤럽)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국민 니즈 파악 및 메시지/사업 기획 방향 설정
- 연구내용: 2016년 11월1주 각종 여론조사(리얼미터와 갤럽의 정기조사) 중 정당지지율/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대통령 후보 지지율 변화 추이 분석
- 연구성과: 국민 여론 흐름 파악 및 대응

## 주제 : 2016년 11월2주 여론동향 분석

- 연구기간 : 2016 년 11 월 14 일
- 연구분야 : 여론동향
- 연구방법 : 언론발표 여론조사 분석 (리얼미터, 갤럽)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국민 니즈 파악 및 메시지/사업 기획 방향 설정
- 연구내용: 2016년 11월2주의 각종 여론조사(리얼미터와 갤럽의 정기조사) 중 정당지지율/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대통령 후보 지지율 변화 추이 분석
- 연구성과: 국민 여론 흐름 파악 및 대응



## 주제 : 촛불민심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6 년 11 월 16 일
- 연구분야 : 정세분석
- 연구방법 : 자체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촛불민심에 나타난 민심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개발
- 연구내용: 촛불민심에 나타난 국민의 NEEDS를 파악하고 당 활동의 방향 및 주요 정책 방향 설정
- 연구성과: 주요 정책 의제 개발

## 주제 : 2016년 11월3주 여론동향 분석

- 연구기간 : 2016 년 11 월 21 일
- 연구분야 : 여론동향
- 연구방법 : 언론발표 여론조사 분석 (리얼미터, 갤럽)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국민 니즈 파악 및 메시지/사업 기획 방향 설정
- 연구내용: 2016년 11월3주의 각종 여론조사(리얼미터와 갤럽의 정기조사) 중 정당지지율/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대통령 후보 지지율 변화 추이 분석
- 연구성과: 국민 여론 흐름 파악 및 대응

## 주제 : 2016년 12월1주 여론동향 분석

- 연구기간 : 2016 년 12 월 05 일
- 연구분야 : 여론동향
- 연구방법 : 언론발표 여론조사 분석 (리얼미터, 갤럽)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국민 니즈 파악 및 메시지/사업 기획 방향 설정
- 연구내용: 2016년 12월1주의 각종 여론조사(리얼미터와 갤럽의 정기조사) 중 정당지지율/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대통령 후보 지지율 변화 추이 분석
- 연구성과: 국민 여론 흐름 파악 및 대응

## 주제 : 2016년 12월2주 여론동향 분석

- 연구기간 : 2016 년 12 월 12 일
- 연구분야 : 여론동향
- 연구방법 : 언론발표 여론조사 분석 (리얼미터, 갤럽)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국민 니즈 파악 및 메시지/사업 기획 방향 설정
- 연구내용: 2016년 12월2주의 각종 여론조사(리얼미터와 갤럽의 정기조사) 중 정당지지율/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대통령 후보 지지율 변화 추이 분석
- 연구성과: 국민 여론 흐름 파악 및 대응

## 주제 : 2016년 12월3주 여론동향 분석

- 연구기간 : 2016 년 12 월 19 일
- 연구분야 : 여론동향
- 연구방법 : 언론발표 여론조사 분석 (리얼미터, 갤럽)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국민 니즈 파악 및 메시지/사업 기획 방향 설정
- 연구내용: 2016년 12월3주의 각종 여론조사(리얼미터와 갤럽의 정기조사) 중 정당지지율/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대통령 후보 지지율 변화 추이 분석
- 연구성과: 국민 여론 흐름 파악 및 대응

## 주제 : 2016년 12월4주 여론동향 분석

- 연구기간 : 2016 년 12 월 26 일
- 연구분야 : 여론동향
- 연구방법 : 언론발표 여론조사 분석 (리얼미터, 갤럽)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국민 니즈 파악 및 메시지/사업 기획 방향 설정
- 연구내용: 2016년 12월3주의 각종 여론조사(리얼미터와 갤럽의 정기조사) 중 정당지지율/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대통령 후보 지지율 변화 추이 분석
- 연구성과: 국민 여론 흐름 파악 및 대응

## 주제 : 2016년 여론동향 분석

- 연구기간 : 2016 년 12 월 30 일
- 연구분야 : 여론동향
- 연구방법 : 언론발표 여론조사 분석 (리얼미터, 갤럽)

###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국민 니즈 파악 및 메시지/사업 기획 방향 설정
- 연구내용: 2016년의 각종 여론조사(리얼미터와 갤럽의 정기조사) 중 정당지지율/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대통령 후보 지지율 변화 추이 분석
- 연구성과: 국민 여론 흐름 파악 및 대응

## 관 계 법 조 문

### 정 당 법

-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